

제433회 국회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일(수)

장 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9)
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0)
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4)
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1)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6)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0)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6)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3)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6)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34.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35.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6)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3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4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4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7)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5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5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59.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6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6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9)
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4)
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0)
7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7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78.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0)
8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8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8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8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9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9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9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9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2)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7)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10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6)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7)
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1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1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11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115.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1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철회 동의의 건

117. 업무보고

상정된 안건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9) 13
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13
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0) 13
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4) 13
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13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13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1) 13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3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3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3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9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19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19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19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6) 20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0) 20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6) 20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20
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20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20
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20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20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20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3) 20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6) 20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20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20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20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20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20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20
34.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20
35.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6)	20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20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20
3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20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20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20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20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20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20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20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20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20
4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20
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20
4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7)	21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21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21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21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21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21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21
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21
5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21
5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21
59.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21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21
6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21
6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21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9)	21
6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21
6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21
6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4)	21
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21
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21
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21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21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21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21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21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0)	21
7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21
7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21
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21

78.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21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0)	21
8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22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22
8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22
8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22
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22
8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22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22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22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22
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22
9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22
9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22
9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22
9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22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2)	22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22
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7)	22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22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22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22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22
10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6)	22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22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22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7)	22
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22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22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22
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22
1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22
1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22
11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22
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23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23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23
115.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23
1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5) 철회 동의를 건	28
117. 업무보고	29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맹성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국토교통부제2차관이 임명되고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하였습니다.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제2차관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 존경하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부제2차관 홍지선입니다.

지난 2025년 12월 29일 제2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세 달여가 지났는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처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2차관으로 부임한 이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물론 저희를 둘러싼 정책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긴밀히 상의드리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임명된 산하기관장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장 이현욱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이번에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한 이현욱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원의 현안에 대해 소중한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원은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관입니다. 이러한 역량을 살려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지원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AI 등을 적극 활용하여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과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원활한 주택공급과 부동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공공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녹색건축물 조성과 노후 건축물 공공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부동산원은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송석연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취임한 송석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며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국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이사장으로 막중한 소명감을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월에 설립된 JDC는 제주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여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해외유학 수요 흡수를 위해 조성한 영어교육도시에는 현재 4개 국제학교에 총 41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로 인한 유학수지 절감효과는 약 1조 500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조성한 첨단과학기술단지에는 현재 193개 기업이 입주하여 총 37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작년에 약 8조 7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한국형 복합관광단지라는 목표하에 조성된 신화역사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유치 프로젝트 중 하나로 현재는 지역주민과 투자기업 간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거듭났습니다.

이렇듯 JDC는 지난 24년간 관광, 교육, 의료, 첨단 분야 등 핵심 프로젝트에 약 7조 9000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확충에 매진하였고 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JDC는 지금까지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 마주한 도전들에 대해 2026년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경우 투자기업 관할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사업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추가 보상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 장기간 지속되어 온 분쟁을 종결하고 변화된 사업 여건과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재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듯 저희 JDC 임직원은 현재 당면한 도전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기회를…… 위기로 삼아 새로운 혁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상세 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왕국 에스알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에스알대표이사 정왕국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식회사에스알 대표이사로 임명된 정왕국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안전경영, 투명하고 책임 있는 윤리경영과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을 통해 에스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기관 운영으로써 보답토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인사말씀은 업무보고 때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토교통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운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간략히 기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지사장 이운상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지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오늘 인사드리게 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이운상입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저희 가덕도신공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2024년 4월 설립된 신생 기관입니다.

주민 이주대책, 건축물 설계 그리고 인허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남부권의 관문공항이 될 가덕도신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경영 전반에 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도 충실히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기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 손우준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손우준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2012년 6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고 2015년 9월에 법정법인으로 전환되어 공간정보산업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그리고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 2월 12일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공간정보 국가 대표 플랫폼인 브이월드 운영을 통한 국가공간정보 활용 지원, 국내외 공간정보산업 현황과 통계 조사, 공간정보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간정보 제공·유통을 위한 보안심사 수행, 국가 기본측량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 검증 수행 등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며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간정보의 활용 증대를 통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경청하여 기관 운영과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9)
2.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1)
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0)
4.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4)
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45)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01)
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1)
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4)
11.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6)
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0)

(10시17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이종욱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30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여 총 5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하자판정기준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준용 자구를 명확히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도읍 의원, 박용갑 의원, 문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거급여의 유형으로 관리비를 추가하고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하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 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

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신설되는 지원센터와 기존 조정위원회의 사업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신 복기왕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3월 30일 총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8건을 의결했습니다.

손명수·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특례를 완화하여 면허 대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되 미준수 사업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현 시행지역인 서울에서 2028년 8월 19일까지 시행하고 2028년 8월 20일 이후의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서울에서의 성과 및 근로시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손명수 의원,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및 권고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기 위해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전문교육기관 지정, 항공교통업무증명, 운항증명, 정비조직인증에 유효기간 및 갱신 의무를 신설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의무 적용 대상을 조정하며 두 종류 이상의 증명을 받은 자가 통합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험도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기준 적용과 동등한 수준의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체 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기준 및 권고에 맞춰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항 운영의 연속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대체 안전수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태준·권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손명수·권영진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가보조금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이종욱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이 통과되면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류세와 함께 다음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기왕 위원님.

○복기왕 위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가 소위원장으로로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다만 일부 관계자들이 택시운송사업의 투명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제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구두의견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법률로 좀 더 확실하게 보충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이것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인택시운송사업자를 비롯해서 또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적용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임 결제·정산 사업자에게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안드립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모두 다 놓여 있을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 위원님.

○윤종오 위원 윤종오 위원입니다.

복기왕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셨는데 지금 수정안 내용이 한마디로 말해서 카드 매출까지 해서 전체 매출을 공개하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복기왕 위원 예.

○윤종오 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사업주들이 제출하고 있는 TIMS나 STIS 이런 매출전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된 상태에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재작년 국정감사 때에도 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했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제출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제출된 자료가 없고,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TIMS하고 STIS에 똑같은 차량을 테스트했을 때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TIMS 자료는 504만 원, STIS 자료는 588만 원, 대략 계산해도 거의 17~18% 정도 될 정도로 사실 금액이 크거든요. 전체 매출액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자료의 신빙성이 완전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매출이라든지 그다음에 운송원가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특히 택시 가동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기에 예외를 40%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90% 이상이 택시월급제에서 완전하게 배제된다는 것이거든

요. 택시월급제 안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정책 결정을 명확한 자료도 없이 그냥 결정하는 것 이게 국토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아직까지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명확한 자료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게 여기에 있는 국토교통위원들이 공유한 상태에서 정책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명확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안 계세요?

지금 자료의 투명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쪽에서 자료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건지 아니면 어디가 부족한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어떻게, 안 되면 국장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것은 담당 국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담당 국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입니다.

소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간 수익의 오차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2.8% 정도 나고 있거든요. 사업장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는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새롭게 공공운수노조에서 원하고 있는 대로 수입을 카드 매출 같은 것들을 정부가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택시정보관리시스템하고 카드 매출 정보하고 연계해서 보다 정확한 수익을 파악할 수 있게 되리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카드 매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정책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5개월 남았는데 4개월이라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시지요. 수익에 대한 것이 정확하지도 않은데 무슨 정책 결정을 합니까?

○복기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마이크 넣어 주세요.

○복기왕 위원 제가 직접 소위원장으로 오랜 시간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고 그리고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불러서 의견들을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법인사업자들 오셨었고요 그다음에 한국노총의 8만 수천여 조합원 대표를 모셨었고 그다음에 민주노총 소속의 민주택시노조 4만 수천여 조합원이 있는 분들의 의견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지금 택시산업이 어렵고 종사자들이 안 오기 때문에 현재 전액관리제 또 완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올 8월이면 일몰이 끝나니까 빨리 법안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으로 하나의 의견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에 아까 민주택시라고 하는 4만 수천여 조합원들이 있는 모임이 하나 있고 그리고 민주노총 공공노조 산하에 그분들 주장으로 한 400명 정도 되시는 조합원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료의 투명성을 주장하셨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법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제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추가로 오늘 수정안을 법안에 집어넣으면 향후 투명성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 종사자들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투명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저는 결코 그른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수정안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통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좀 존중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또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서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의결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택시운송사업의 수입이 공평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모든 정책 결정 과정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정부도 100% 다 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택시업계의 운송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해당 조항을 추가해 넣고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아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윤종오 위원 지금 택시 월급제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고 택시노동자들이 염원으로 생각하고 십수 년 이상 또 투쟁을 해서 만들었던 결과고 합의에 의해서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정적으로 시행을 해 본 적이 사실 없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서울시·국토부 이것이 투명성 있게 전체적인 매출도 확인이 되고 또 운송원가도 파악이 되어서, 운행되는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을 본 적이 사실 없는 거예요, 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런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해 보고 사실상은 아직도 매출·운송원가, 여기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거의 폐지에 가까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해 볼 만큼이라도 해 보고 통과됐으면 제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어떤 이해관계자가 좀 복잡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윤종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어렵게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월급제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시행을 안 해 보고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보였기 때문에 이 제도를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보완해서 가자 하는 취지로 이게 수정안이 나온 거고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이 되는 운송수입이 객관적으로 관리가 안 되면 할 필요가 하나도……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부가 상황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업계 그다음에 근로자분들 그다음에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진짜 머리를 맞대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을 더 해 나가셔야 되

고 그것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결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할 법률안 중 재정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비용추계를 의뢰 하였으나 본회의 부의 전까지 비용추계서가 회신되지 못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 첨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5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9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찬반토론에서 제기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을 원만히 정착시키고자 일부 예외를 허용하되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단을 도입하였고 이후 주 40시간제의 성과 분석, 시행지역의 객관적인 선정을 위해 택시운송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근로자들의 삶이 더 나빠져서는 안 되고 결코 승객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운송사업자, 업계 관계자는 철저히 준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제12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자구의 정리와 대안 및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장관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이종욱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 복기왕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 가운데 항공안전법 등 총 13건의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신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할 순서입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38분)

○위원장 맹성규 법률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 예정인 의사일정 제57항과 제100항 및 제114항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과 제100항 및 제114항을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4)

1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6)

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60)

1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16)
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0)
19.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6)
20.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6)
2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5)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3)
2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5)
24.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5)
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4)
2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3)
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6)
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1)
2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3)
3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0)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2)
3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00)
3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54)
34.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9)
35.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북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6)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3)
3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79)
38.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9)
3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4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77)
4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7)
4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99)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9)
4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4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5)
4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9)
4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2)
4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35)

4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7)
5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3)
5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5)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09)
5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6)
55.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64)
5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5)
57.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58.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5)
59.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7)
6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5)
6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3)
6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51)
63.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89)
64.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6)
65.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1)
66.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4)
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9)
6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6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17)
7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8)
7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8)
7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1)
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4)
7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0)
75.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빈 건축물 정비 및 활용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34)
7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8)
7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9)
78.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4)
7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760)

8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50)
8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29)
8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46)
8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90)
8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7)
8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2)
8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5)
8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03)
8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14)
8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9)
9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50)
91.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3)
9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8)
9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1)
94.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22)
9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4)
96.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7)
9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24)
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3)
9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72)
1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101.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6)
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0)
1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2)
1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7)
10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3)
106.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4)
10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72)
10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95)
10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84)
11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73)
111.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9)

112.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1)

1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78)

1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115.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15항까지 총 101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문대림 의원님, 오셨습니까?

○문대림 의원 예.

○위원장 맹성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계 평화의 섬 제주시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기간시설인 공항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밤낮없는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행법은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는 주로 시군구가 소유한 시설물이나 비품 취득 등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 소유의 마을회관·경로당·체육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간임에도 소유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수나 보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관리하는 공동이용시설까지 확대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지원이 지자체의 자산 취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음 피해를 입고 계신 주민들의 공동체 공간으로 직접 전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 숙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출된 법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항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78항까지 법률안에 대해서 박현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현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국토 분야 법률안 65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배부해 드린 요약본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종균 의원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보증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의 보호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관련 단체 간 이견 해소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쪽,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윤종오 의원안은 공작물 해체 신고·허가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사고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복기왕 의원, 엄태영 의원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 참여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6쪽,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박용갑 의원안은 관리주체의 포괄적 법령 준수 의무와 이에 따른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리주체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개별 조항에 연계된 과태료나 벌칙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엄태영 의원안은 기부채납 부동산으로서 임대인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 중개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무상사용 기간 등을 추가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 복기왕 의원, 권영진 의원안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담합으로 인한 시세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았으며, 이어서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초광역권 내부의 거점 대도시·중소도시권을 중심으로 광역권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쪽, 맹성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의신청 검토 시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부동산원이 분리됨에 따라 합리적인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2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이연희 의원안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허위정보 유포 행위 및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규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고, 배준영 의원안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현황을 통합하고 정보 분류체계를 단일화하여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관리가 가능해지는 효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3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안태준 의원안은 시장·군수 등으로 하여금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1년 단위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빈집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어촌 빈집관리체계와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김도읍 의원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국민들이 회의 과정에서의 발언 요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주거정책 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7쪽,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손명수 의원안은 장수명 주택 인증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기관 외에 운영기관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인증 제도의 개선과 우수 장수명 주택 보급·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고, 윤재옥 의원안은 주택건설지역이 철도와 인접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해당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 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철도 인접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입법으로 보았으며, 18쪽 김희정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 반영을 제도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 취지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각 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114항까지 법률안 및 제115항 청원에 대해 오세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세일 전문위원입니다.

교통 분야 36건의 법률안 및 1건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류유인시설 관리 범위를 현행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 지역에서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항 주변 조류충돌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조류유인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설날, 추석, 선거일 등에 택배서비스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려는 것으로 택배종사자들의 실질적인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제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택배 종사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다만 소득 증대를 위해 추가 근무를 선택하는 등 독립 사업자 지위를 가지는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 유통·물류 생태계 전반에 대한 과급효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전 기준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운영하다가 휴업·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재등록하는 경우 강화된 기준 대신 종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자동차매매업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화된 기준을 준수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엄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범운행지구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지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범운행지구의 신속한 조성과 지역 맞춤형 실증 환경 조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복기왕·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제도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한도가 유류세 인상분 범위 내로 제한됨에 따라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의 구매비용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민생활, 경제활동 등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상황에 한정하여 유류구매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재정지출을 방지하고 지원 범위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에 맞게 보조금 지급정지 규정의 주체를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부

분은 이에 맞춰 시행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건태 위원님.

○이건태 위원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이 법 알고 계시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건태 위원 저희 민주당에서 제가 원도심 관련 의원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고 문진석 의원님과 허종식 의원님이 대표를 맡아서 이 법을 성안했고 또 국민의힘의 권영진 의원님 등 열 분이 참여해서 여야 의원 37명 발의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간에 이 법안을 만들기까지 정책토론을 두 번 했고요. 장관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이 법안이 추진된 이유는 장관님 잘 아다시피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서른일곱 분의 여야 또 무소속 의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이 법안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 법안 통과에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이건태 위원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 저희 국토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이상 질의……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도권에 대한 집중 그리고 과밀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수정법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 거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법을 내게 된 거는 수도권이라고 해도 수도권 내에 인구감소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법으로 89개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법과 인구감소지역의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밀억제지역 그리고 성장관리, 자연보호지역,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규제를 축으로 하기 때문에 이 수정법을 수정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물질을 더 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장관님께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장관님 지역구인 전주 같은 데도 인구가 감소하는데 오히려 그

것을 억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수도권 집중 억제라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국토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존에 틀을 잡아 가지고 규제하고 인구를 억제하고 하는 거는 그것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다만 배 타고 네 시간을 가는 지역이라든지 DMZ랑 붙어 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지역까지 이렇게 성장관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일이 규제하고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체토론인데 답변을 좀 들어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다만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수도권 집중에 대한 현재 과밀억제 이렇게 여럿 되어 있는 것을 개편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지원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번에 제가 그때 행사 때 간 이유도 그런 도로를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는 게 필요하겠다 해서 저도 사실 행사에는 갔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는 문제와 함께 더불어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장관님 말씀하신 취지도 충분히 공감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입법자로서 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역균형발전법 이렇게—지균법이라고 그러지요—이 두 법 체계 간에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제가 입법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토부의 의견은 알겠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위라든지 전체회의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배 위원님 뭐 더……

○**배준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78항까지 법률안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114항까지 법률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115항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025) 철회 동의를 건

(10시59분)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를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부터 복기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철회 요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이에 우리 위원회의 철회 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서 철회 동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 업무보고

(11시00분)

○위원장 맹성규 의사일정 제117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그리고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나머지 7개 공공기관의 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토교통부장관……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전체회의 준비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석 요구를 여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중대한 권력남용 의혹입니다. 장관 직속 부서가 인사 시기, 방법 그리고 나아가 청와대 보고 및 승인까지 전제로 한 인사방침을 전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엄정한 검증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의 독립성,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국정 문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관련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학재 전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저희 국토위의 기본적 책무이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감시 기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진상규명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이학재 전 사장에 대한 보복성 표적 수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복기왕 간사님.

○복기왕 위원 국민의힘에서 야당의 입장으로 그런 주장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임위에 계류된, 하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상반기 상임위 임기가 다 끝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께서 소위를 매주 열어 주시겠다고 해서 한 번 열렸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열릴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의혹은 풀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인사 개입 혹은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기관장이 제기한 부분 이것을 우리 민생 상임위원 국토위에서 갑론을박하다 보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민생 해결의 과제들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운영위원회 내에서 토론들이 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에서 충분히 이런 말씀들이 오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토상임위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민생 현안들, 밀린 숙제들을 어서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의견을 드렸다는 양해의 말씀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저는 의사일정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법안 심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하나는 현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의사일정에 올라와 있는 법안을 다 봤더니 57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안일이 26년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100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안일이 3월 26일입니다. 그리고 114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안일이 3월 26일입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지 상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을 봤더니 굉장히 민생과 관련되고 우리 상임위가 다루어야 할 법안임에는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숙려기간을 생략하게 됐을 경우에 위원장님이나 또는 사무처로부터 이렇게 숙려기간이 생략된 법안이 있다라는 보고가 저는 오늘 중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전혀 그런 말 없이 스리슬쩍 끼워서 왔습니다.

국회의 절차라는 게 모든 상임위원회와 국회에서 동일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된 부산 글로벌허브시티법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숙려기간을 핑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현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룰이 모든 상임위원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지 마침 법안의 숙려기간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 생략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여야 협의로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가 없었던 점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그런 원칙이 국회 안에 모두가 다 일관된 원칙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 부분 공공인사 개입이 민생과 상관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책을 미치는 조직에 운영 공백이 일어나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일어나고 직접적으로 그 행위가 국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업무 공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민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 데다가 현행법 위반 사항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 정권에서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상황이 지적이 됐을 때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서 지금 4월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좀 덜해지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희정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먼저 의사일정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양당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국토교통위원님 서른 분이 다 들어가는 카톡방이나 어떤 의사결정 이게 없어요. 지금 저의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 이게 좀 부족하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이라도……

김희정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각 당은 간사님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되고 그러니까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간사님들이 전달해 주지 않으시면 더더욱이 정보가 차단되는 그리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사님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른 분이 다 들어가는 어떤 의사결정을 고지하는, 보좌진들은 각 당별로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각 당별로 별도의 채널을 강화해서 의사전달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그런 거는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기 끝나는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해서 혹시 다음에 여기 국토위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제가 차기 위원장한테 확실하게 전달해 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정 위원 국토위원장이 이제 야당 뭉으로 오는 겁니까?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거는 제 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공사 사장 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복기왕 간사도 언급이 있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더 논의가 있으셔야 할 것 같고요.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국회 어디서든지 간에 한 번쯤은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사님들은 좀 더 논의를 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더 적절치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가 직접 관여가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다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문제 제기가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들 더 논의해 주세요.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사항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복기왕 간사님과 이종욱 간사님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토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일상인 국토와 주거, 교통 정책을 다루는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입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민생 안정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국토 균형성장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대한민국의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국토부의 주요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성장을 위해 모두가 잘사는 국토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고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인 중소도시의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고 단순한 이전을 넘어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새만금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계획이 지역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와 산업을 유입하고 지방 건설경기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공간을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어디서나 품격 있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9월 7일, 올해 1월 29일 발표한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은 가속화되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 드리겠습니다. 특히 좁고 낡은 공공임대주택을 고품질의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전세사기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하여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도 확충하겠습니다.

자율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 AI 시티 조성 등 국토교통 분야의 AI 대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고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건설·교통·물류 종사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땅 밑, 도로 위, 하늘길 빈틈없이 국민의 안전을 챙기겠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분들과는 계속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우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 편익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코레일과 SR 통합은 보다 빠르게 추진하고 향후 철도차량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아닌 여행길에 즐거움을 더하는 휴게소로 거듭나도록 서비스 전반을 신속히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토교통부 업무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 분야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상임위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관 김이탁 1차관입니다.

제2차관 홍지선 차관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위원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실장입니다.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실장입니다.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실장입니다.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본부장입니다.

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직무대리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실장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박지홍 위원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국장입니다.

도로국장 이우제 국장입니다.

철도국장 김태병 국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검토하셔서 각 기관별로 문제점 같은 걸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질의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관보고는 다음에 듣고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님, 나와서 인사말씀 하시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3월 3일 자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임명된 김태승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한국철도공사는 국민의 편익 확대를 위해 고속철도 통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열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차량을 신차 수준으로 개량하고 신규 차량은 조속히 발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철도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답을 찾아가며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타파하고 철도안전의 근본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국민께 신뢰받는 코레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권영진 위원** 우선 오늘 보고 자료를 보니깐요 지금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는 급등하고 있고 환율은 고공 행진이고 원자재 수급도 차질이 돼서 국가적인 비상 대응체제로 전환해 있고 전쟁 추경 26.5조를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 너무 한가한 것 같아요. 정말 업계에서도 지금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한 데가 많고 한테 그러면 적어도 오늘 업무보고 어느 부분에서인가 지금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든지 지역 공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권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 추경 상정 보고 시에는 그걸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지난 2월 27일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 대 5000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외 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 5월 14일, 8월 8일, 11월 11일 그리고 2026년 2월 27일 네 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록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글사가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요청하면서 보내 왔던 서류 일체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 차례에 걸친 작년도 관계기관 협의체 이후에 국토부가 구글사에 어떻게 어떻게 보완하라고 요청했던 서류 그리고 구글사가 보완해서 제출한 서류 일체를 오늘 상임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 의원실로 보내 주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위원장 맹성규 권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글 관련 자료는 판단하셔서 제출을 해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리고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1차관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다음, 내일 저희가 추경 관련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해요. 그다음 회의는 4월 7일 날 의결하는 회의로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권영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지요. 예를 들어서 차량 부세 실시라든지 말씀 주신 것처럼 항공기 운항, 항공사들은 지금 유류할증료 때문에 운항을 단축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행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소비 위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일 보고가 가능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그러면 내일 저희가 추경안 상정할 때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 자료 요청과 응답에 대한 정부 부처의 전반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중요하게 보이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차량용 스티커를 제가 입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 표지판을 달고 어디까지 출입이 가능한지, 소위 지정용 차량인지 이런 것을 문의했는데 저희 의원실에 ‘뭐 이런 걸 자료 요구를 하나, 주웠으면 그냥 돌려주면 되지 자료 요구를 하나?’ 이런 답이 오늘 아침까지도 왔습니다.

(표지판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이것 달고 공항 어디든 다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공항에서 주운 거거든요. 새벽에 부산 가는 길에 주웠는데 그날 밤까지 아무도 가지고 가지 않는 걸 저희 보좌관이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보여서 이것과 관련된 정책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웠으면 돌려주면 되지 무슨 자료 요구를 하나?’ 이런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와 이것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차량 운행일지 등 해서 같이 요청받아야 되겠는데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문제 지적해 주시고 자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셔서 알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이 프리패스하는 표식이잖아요. 제가

저것 언뜻 봐도 식별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면 저것 누구나 인쇄해 가지고 모조품이나 위조품을 만들어서 다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건데 첫째, ‘돌려주면 되지’ 이것 답변한 사람은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걸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김희정 위원 이것 가지고 관세센터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관님.

○위원장 맹성규 두 번째는 저렇게 허술하게 안전관리가 돼 있다는 것은, 항공 지역은 최상의 보안 지역인데 이것은 구멍이 뚫려도 엉뚱한 데서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프리패스할 수 있는 아까 주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용 가능하기가 쉽고 또 그걸 분실한 그런 것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겠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국회 측의 요구에 대해서 그런 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인지 확인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오늘 위원회 마치기 전에 자료도 오고 상황 파악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건지하고.

○위원장 맹성규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 오늘 어차피 회의가 쉽게 일찍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깐 오찬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이 자료를 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공항의 보안이 뚫릴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부터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떻게 할지 그것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의사결정을 해서 방향이라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정말 잘못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은 김희정 위원님한테만 이렇게 딱딱 걸리는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전혀 안 와요.

○김희정 위원 평소 공항을 자주 이용하시고 살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국토교통위원장 자리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지요, 위원장님?

(웃음소리)

○위원장 맹성규 하여간 여야 간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주 중대한 문제고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위원장 맹성규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과 명목세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주요 국가별 보유세가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을 구분하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구분해 가지고 각 국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질의할 때 필요하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것 바로 준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각 국가별 보유세율·명목세율이 다 준비돼 있는지……

○김정재 위원 지금 보유세 가지고 논란이 뜨겁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데 왜 올려야 되느냐,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높다라고 연신 주장을 하고 있고 연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은 다른데 이것에 대한 구별 없이 그냥 우리는 실효세율을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명목세율을 얘기한다는 것은 수평 비교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자료가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일단 자료 존재 유무를 확인해 보고요. 제출 가능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래야만 국토부에서 지금 보유세 논란, 기재부하고 얘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도 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상황이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좀 알아본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출하실 것 제출해 주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들 간의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는 12시 반에 마치고 점심시간을 오늘은 좀 길게 해서 3시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간에 캐나다 통상장관하고 면담이 있어서 면담을 마치고 3시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녁시간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윤종오 위원 5분 하고 또 다음에는?

○복기왕 위원 차수 변경할 거예요?

○위원장 맹성규 차수 변경, 충분히 드릴게요. 제가 오늘 간사 협의를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남지 않아서 권한을 충분히 활용해 보려고, 기대해 주십시오. 질의는 간사님들 간에 협의해서 충분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5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무래도 오전 질의는 황운하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 정도에서 완료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연희 위원님 안 계시면 그냥 황운하 위원님 순서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이번 추경에서 유가 상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소외된 부

분이기도 하고 또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공공교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것이 계속 정부 대책에서 빠져 왔던 부분인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전세버스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건 대충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2월 말하고 3월 중순을 비교하면 열흘 사이에 유가가 한 20% 이상 올랐어요. 그렇지요? 그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전세버스업계 운송원가가 한 8%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버스의 경우에 유류비 비중이 한 25~40%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송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버스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4만 대 정도가 됩니다. 4만 대라 그러면 화물차가 38만 대고 노선버스가 1만 6000대, 택시가 25만 대라는 걸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전세버스가 차지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리고 전세버스의 한 70~80% 정도는 실질적으로 통학이나 통근이나 이런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상당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에서 계속 누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류보조금 제도에서?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이번 추경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안 들어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상당한 부분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배려를 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위원 공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에서는 전세버스에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게 기존에 공공성이 약하다는 이유 또 여러 가지 운임 규제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 전세버스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가연동보조금 문제 협의하면서 재정 당국하고 전세버스 추가하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다만 이번 추경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번 추경에 안 들어가 있던데 그러면 추경예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배려가 될 수 있는 건지 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하고.

또 하나, 전세버스 자체를 금방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말씀하신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70% 정도가 실제로 통근이나 통학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 이런 정도면 전세버스가 대중교통의 상당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공감합니다.

○송기현 위원 지금 유가보조금 잔액이 한 5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세버스에 유가보조금을 해 준다고 해도 이 금액이 한 1000억에서 12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유가보조금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런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재정적 여력도 가능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도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국토부의 령에 따라서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토부 자체적으로 저걸 바꾸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예산 문제가 끼어 있어서, 이건 또 지방자치단체하고도 결부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요 협의해서 조속히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4만 명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4만 대면 4만 명과 플러스 그 가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철도 유희부지가 전국적으로 약 36만㎡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중에서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1600만㎡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이쪽 지역에는 철도가 고도화되면서, KTX나 이런 고속전철화되면서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더욱더 많은 유희부지가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그런데 그 유희부지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레일도 그렇고 또 국토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철도 유희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다, 정책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발의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검토해 주시고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송기현 위원님이 제기하신 전세버스 유류세 지원하는 방안은 오래됐는데 이게 전세버스 특성이 있어서 레저용하고 그다음에 출퇴근용이 용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전제가 돼야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아마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은 윤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 위원** 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서울의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안정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무척 다행이고요. 정부의 대책도 영향이 있었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되었고 또 장관님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감사합니다.

○**윤종오 위원** 대통령 말씀대로 시장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급한 불은 꺾지만 보유세 정상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있지 않으면 다시 부동산이 꿈틀거릴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고 다양한 형태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진행한 후에 발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일단 이렇게 약세로 전환된 것은 양도세 부과도 있겠지만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 이미 좀 반영된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관님께서 보유세 강화가 개인 소신이라고 발언하신 적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취임해 가지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게 좋겠다, 개인 소견 차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그래서 정부의 보유세 개편은 반드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리고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셨는데요. 저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책 중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익일, 전입신고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발생하는 걸 갖다가 당일 날 발생하는 걸로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아주 잘하셨는데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자료에 나온 것 보시면 알겠지만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보면 선순위 갑투자와 선순위 권리 과다 또 계약상 기망, 신탁사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차계약 등기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경매청구권 등 세입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의원님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발의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전세 거래 정보를 일원화해 가지고, 뭔가가 정보를 속여서 하는 경우 있지요? 그런 경우라든가 또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해 줘서 정확한 정보들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했고 또 발표를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현재 여러 가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 경로당과 관련해서 사진 한번 보여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 사진입니다. 장관님, 잠깐 보시면 경로당으로서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열악해 보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 지역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게 사실은 경로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 150세대 이상만 경로당이 의무화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런데 사실상 150세대 이하 경로당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사세요. 저게 지금 창고나 관리사무실 한쪽 구석을 경로당처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제대로 없거나 화장실하고 부엌하고 같이 쓰는 경우도 많고요.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동의합니다.

○**윤종오 위원**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

한 1분 조금 더 주시면 다음 추가질문 안 하고……

○**위원장 맹성규** 추가를 안 하실래요?

○**윤종오 위원** 예, 안 하고 조금만 더…… 한 1분?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2분 쓰세요.

○**윤종오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리고 추가질문 안 하신다 그러니까……

○**윤종오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가정어린이집이 아파트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요즘 경로당 지으려면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7억, 8억 듭니다. 그렇지요? 저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소형 아파트인데 만약에 아파트 1층에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한다 그러면 대부분 1억 미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남녀 구분한다 치더라도 한 2억 정도면, 조금 리모델링하면 얼마든지 경로당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빠른 시간 안에 경로당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는 데 3분의 2 동의받고 이런 절차 거치면 사실 못 하는 겁니다. 또 경로당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나이 들면 다 가야 될 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지금 합천의 촌에 가면 열몇 세대밖에 안 되는데 경로당 크게 있습니다. 150세대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동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윤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지자체는 하려고 하는데 국토부에 막혀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대책 확실히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장관님, 뜨거운 감자 분양가 상한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 최대어라고 불리는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서초구 반포동에 분양 예정인데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그 중의 1892세대가 일반분양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데 예상 평균 분양가가 최대 9000만 원입니다, 평당. 약 34평이면 한 30억 원 정도고요. 24평, 22평 정도가 2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양가 전매 제한이 한 3년 걸려 있고요.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는 기간도 2~3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청약지 인근 아파트 매매가가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첨되기만 하면 요즘 로또 평균 당첨금보다 두 배가 많은 한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야말로 로또 중의 로또 청약, 돈 놓고 돈 먹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은 접근할 수 있느냐? 꿈도 못 꾸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매매가 25억이 넘는, 25억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으로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25억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상황이 정당한 것 같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태준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요 재원이 주택청약통장인데요. 해지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금 여유 자금도 감소 추세고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 건전성에도 빨간 불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청약통장은 1년 만에 26만 좌가 줄었고요 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3년에 25년, 그러니까 2년 만에 4조 9000억이, 25%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현금 부자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분상제가 변질됐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의 해결 방법으로 과거에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에 적용했던 주택채권입찰제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취임 직후에 분상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국토부에 물었더니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이 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지 반년이 넘었는데 분상제 개편을 위해서 국토부의 적극

적인 의지나 실행력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들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런데 과거에 판교에서 했던 경우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방식은 채권 상한액을 100% 정도까지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상제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90% 정도면 100 마이너스 90, 10% 정도를 채권 상한액을 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의 분상제 지역에서 인근 지역 시세 대비 100% 이하로 분양된 민간주택 23곳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해 보니까 추가 환수할 수 있는 규모가 1조 5300억에 이릅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이 25년에 15.2조였으니까 10%가 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서민 주거사다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강남 3구 등 분상제 지역의 민간주택 청약의 분양가는 서민들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의 주거사다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주변 매매가 자체는 두 배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로또 청약 이렇게 변질된 지가 오래입니다.

채권입찰제, 제가 이것도 로또 청약이라고 지칭이 되는 민간주택에 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공공주택은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국토부의 의견도 저희 의원실에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진행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중동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애쓰셔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공공부문 2부제라든지 민간 5부제 같은 경우도 지금 검토 중이지요? 필요하다면 하신다는 입장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리고 유류세도 탄력세율을 50%까지 낮추면 한 300원 정도 더 낮출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검토 중이시고.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사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 같은 데는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을 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상급지와 부동산 전쟁에서는 이겼을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그냥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아파트가 120억인데 90억에 나왔다고 그것 서민이 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서울 외곽의 아파트 값이 굉장히 더 올라서 점점 살 수 없을 지경이 돼 버리고 전월세가 씨가 마르고 가격이 폭등을 해 가지고 주거의 사다리가 완전히 건너차 가지고 없어졌어요. 이걸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 데이터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매매지수가 25년 1월 90.8에서 2026년 2월 100.7로 10.95% 폭증했고 반대로 지방권 매매지수는 떨어졌어요. 0.7% 하락했고 서울은 폭등했는데 지방은 하락했다, 다시 말해 규제가 수요를 억제한다기보다는 뚝뚝한 한 채를 더 심화시켰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 10월 규제 발표 이후에 단 4개월 만에 서울 전체는 3.54% 올랐는데 이것은 규제가 가격 잡는 데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서민이 대부분인 전월세 시장인데 규제가 가격을 잡기는커녕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해서 임대료 상승을 야기했고요 전세가격지수는 2025년 1월 대비 4.8% 상승했고 그리고 규제 강화된 2025년 10월 이후에는 4개월 동안 2.3%, 이전 9개월간의 흐름보다 훨씬 더 가팔라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지수도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25년 1월 대비 5.6%가 상승해서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4.8%를 넘어섰고 전세 물건 부족으로 인해 세입자들이 전부 월세시장으로 다 몰리고 있고요. 서울은 그런데 지방의 경우에도 매매가 하락은 하는데 대조적으로 월세는 오히려 1.9% 올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5년 10월 규제 발표를 기점으로 서울의 모든 지표, 매매·전세·월세 동반 상승을 하는데 그 기울기는 더 가팔라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정부에서 하는 게 서민들의 주거 안정 정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게 과연 정부가 시장을 이긴 결과인가? 제가 볼 때는 일부 시장을 이기려고 전체 시장을 무너뜨린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세의 월세화, 가격 급등, 이재명 정부 탓 아니라고 지난 국정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신뢰할 만한 정책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께서 ‘보유세 인상할 것, 투기성 부동산 강력 대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전월세 이것에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없다는
 피 한데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상태가
 안 좋다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문제에 대해
 서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
 습니다.

○**배준영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마련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전세 부
 족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 공급이 활성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급 활성화 대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
 겠다, 그래서 상가를 집으로 바꾼다든가 여러 가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배준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염태영 위원** 수원무 지역 염태영입니다.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불공정 거래 행위 또 택배 노동자
 과로사 이런 것 때문에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2일 동안 연석청문회
 가 열린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하나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3년간 쿠팡의 택배기사들 과로사 일지입니다. 3년간 따져봐도 알려진 것만 해도
 한 8건 되고요 그중에 주간 배송이 2건이 있고 6건이 야간 배송이고 60시간 초과한 경우
 도 많고 많으면 83시간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산재로 인정을 이미 받
 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했
 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 죽음을 개인 질병 또는 예외적 사고로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데이터 공개를 거부했고 또 사실
 을 왜곡하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인 은폐 지시가 있었는데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가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해’ 이런 문자도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석청문회 때 제가 쿠팡 해럴드 로저스 대표께서 야간 배송이 더 위험하
 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체험해 보라’ 그랬더니 같이하자고 그래

서 같이하기로 해서 실제 이틀을 했습니다.

쿠팡의 현장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직고용된 쿠팡친구들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분들은 택배 차량이 쿠팡이라고 정확히 써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 형태는 영업점과 계약돼 있는 택배기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분들은 자영업자처럼 이렇게 돼 있고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분들은 킥플렉서라고 부르는데 8건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킥플렉서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새벽 배송에 대해서 쿠팡 측에서 요청이 자기들이 직고용한 쿠팡친구들로만 해야 된다고 계속 요청해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고선 저는 비공개로 일주일쯤 전에 킥플렉서들하고 같이 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봤습니다.

쿠팡친구들과 킥플렉서로 이루어지는 이것, 두 분 다 참 열심히 일하는데 킥플렉서로 한 것은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택한 곳은 봉천동 담당이셨는데 가파른 일방통행 언덕길을,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의 보통 빌라 같은 걸 수 없이 오르내리는데 그날 제가 담담해서 같이 나가서 배송했던 게 340개의 물건이었고 230가구를 방문했었어요. 금요일이라 평소보다 사오십 개가 적다고 그러더라고요. 잠시 1분도 안 쉬고 뛰었습니다, 그분. 제가 같이 따라만 다녔는데 저 그날 돌아와서 코피 쏟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노조 대표하고 쿠팡친구들에서 한 건 그분들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준비체조도 하고 1회전·2회전 사이에 30분씩 휴식도 하고 2회전·3회전 그 사이에도 30분 휴식을 했습니다. 그날 200개의 물건을 130가구에,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신분으로서 킥플렉서들이 과로사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 체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쿠팡본부 노조가 ‘우리도 그렇게 일하고 싶다’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저희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생활물류법 개정안도 냈고 그랬지만, 클렌징 제도도 없었고 그랬지만 현장에서는 깜깜이 단가로 단가가 공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청 단가를 모르는 가운데 영업점 간 수수료 기준을 기준금액의 90% 이렇게만 정해 주니까…… 원래 금액을 모르니까 90%라는 것을 그저 이분들은 대리점에서 90%고 착각한다 이렇게 통보하면 그냥 통보를 받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배송 단가, 월 배송량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된다.

또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격주 5일제 근무를 하게 돼서 주 5.5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또 아까 과로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쿠팡만 사회적 대화에서 계속 어깃장을 놓고 있고 이러면서 지금 수개월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통령께서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이를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자리에서는 쿠팡에 대해서 새로운 노동 형태나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거 들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국토부가 이에 대해서 과로방지 대책을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점검과 확실한 대책을 만드셔야 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입법으로도 과로사로 내몰릴 수 있지 않게 해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쿠팡에 대해서 현장점검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노동 형태나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현하도록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회적 합의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장관님의 강력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더 원만한 대화를 위해서 사회적 대화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에 저는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원칙과 방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국토부도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 국회와 적극 협력해서 입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도 위원님처럼 쿠팡 택배 현장에 나가서 한번 직접 그 일을 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더 실태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장관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고요. 그럴 때는 가장 험한, 많은 수량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가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맹성규 염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요. 장관님과 국토교통부 직원들은, 더불어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때, 지금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표준계약서 개정을 할 때 같이 의견을 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특별하게 가진 수단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계약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염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명수 위원님.

○손명수 위원 장관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질 좋은 주택의 공급이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게 국토부의 역할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손명수 위원** 공급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주연구원 분석 자료인데요. 오세훈 시장 취임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서울시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매우…… 인허가도 13.9% 떨어졌고 착공, 분양, 준공 다 많이 부족하거든요. 비서울과 비교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다음 보여 주세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무래도 입지도 좋고 거기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인데 재개발·재건축에서 핵심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이 가장 의미 있는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조합 설립,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문제예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신통기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통기획이 완료된 사업 중에서 착공까지 간 거는 2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이유가 구역 지정을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심의·결정을 하는데 이게 한 달에 두 번 열린답니다. 한 5건씩 한하는데 수백 건이 여기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지연되면 1~2년 그냥 지연돼 버려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법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있는데 보시면 8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는데 특·광역시의 자치구청장만 딱 빠져 있어요. 일부러 배제시킨 겁니다. 그래서 특·광역시장이 인허가권을 구역 지정 포함해서 다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지연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자치구청장에게 이양을 하자.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자치구별로 도계위도 하고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이 훨씬 신속하게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당 출신 구청장, 야당 출신 구청장 다 공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권한을 달라, 그러면 훨씬 빨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치면 제가 보기에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이 발의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다음, K-패스 모두의카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대광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광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K-패스 모두의카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명수 위원** 국토부에서 지금 중동전쟁 때문에 유가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이 부분은 탄소중립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국토부의 모범적인 정책인 것 같아요.

다음요.

이게 기본형과 정액형 두 가지가 있는데 정액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은 한 달에 6만 2000원, 청년이나 2자녀·어르신들은 5만 5000원, 3자녀 이상이거나 저소득층은 4만 5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다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굉장히 체감이 크고 또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전국 모두 다 적용이 되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470만 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480만 명을 넘었습니다.

○**손명수 위원** 480만 명 그 정도 하는데 올해 모두의카드 도입 1월 달 이후에만 한 40만 명 이상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예, 그렇습니다.

○**손명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인데 올해 보니까 추경에도 이게 많이 반영이 돼 있고 증액이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예산 확보도 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절차가 모두의카드를 발급받고 또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이거를 그런 데, 기술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확보와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가입 절차가 카드를 발급받고 앱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카드만 가입해도 내부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 부분들이 효과가 좋은데 홍보되는 부분은 온라인·오프라인 여러 다각화한 또 교통 거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정률형으로 877억 원의 추경이 반영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600만 명 규모로 시스템을 설계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좀 확장하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손명수 위원** 절차를 더 간소화해 주시고 홍보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위원입니다.

장관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첫 페이지 보니까 국토부의 임무로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한다’는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아마 국토부가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설계하는 핵심 부처라는 그런 자부심의 표현이라고 여겨집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특히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첫 화두가 균형성장이고 그 핵심 전략으로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을 내세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명시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의 신속한 조성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국가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화려한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봅니다, 실천. 그런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조성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건 또 장관님께서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리고 또 대통령을 모시고 한 지역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현재 15개 신규 국가산단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종양 위원** 그런데 지금 15개 중에서 7개는 한 발짝도 사실상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7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있고요. 더욱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봤을 때는 용인 반도체 산단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산단마저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엄청난 큰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용인 반도체 산단은 당초에 예타 면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최근 정치인들이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등등의 어떤 그런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서 이것마저도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어요. 원래 올 상반기에 부지 매수 다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부지 매수한 것을 보니까 삼십몇 %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LH에서 시공사도 선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잘 나가다가 정치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지금 차질을 보이고 있고 LH에서도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창원 방위·원자력 국가산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K-방산이잖아요. K-원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는 한 발짝도, 그야말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게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야 그때부터 뭔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미루어지고 있어요. 벌써 후보지로 발표된 지가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하나도 진행을 못 시켰다는 그런……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토부하고 시행주체인 LH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장

관남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좀 설명을 잠깐 드려……

○김종양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 주신 창원 산단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저는 위원님이 제시하신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폐광 때문에 창원 산단이 일부 중지되었고 거기에 대한 제척 결정이 되었거든요. 다만 현재 또다시 오염이 생긴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폐광과 연관돼 있는 오염 지역이라면 좀 심각하지만 폐광과 연동돼 있지 않은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창원시청 공무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희 국토부 공무원과 창원시에서 올라오신 분들 3자가, LH하고 4자가 회의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문제는 어쨌든 오염이 발견된 조건에서 그 오염을 무시하고 진행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걸 감사를 하게 된다면 그 일에 관여한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조치 될 수밖에 없으니 현재 그 오염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선행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루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문제는 현재 창원시가 선거 과정에서 지금 시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일단 LH가 우선적으로 LH 비용으로 이걸 추진해서 하루빨리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빨리 개선책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창원시, 국토부, LH, 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종양 위원 예, 우리……

○위원장 맹성규 추가로 질문하시면……

○김종양 위원 계속 진행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보충질의 안 하시고?

○김종양 위원 예, 그렇게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김종양 위원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관계기관 대표를 불러 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주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지난번에 1차 폐광으로 인한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다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척시키고 사업계획구역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지금 국토부에 올려 놓은 그런 상태고요. 지금 15개 했을 때 그 15개 폐광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 지점에 대한 조사에서는 토양오염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 제척이 됐습니다.

○김종양 위원 제척이 됐기 때문에 또 충분히 구역도 조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 분위기는 시행주체인 LH가 너무 공익보다는 사업성을 내세워 가지고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H에 지금 사장이 없다 보니까 LH 사장이 공석이라는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이 사업의 추

진에 있어서 소극적이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이 권한대행이든 현 사장이 또 정식적으로 보직을 받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든지 간에 직무대행도 대행이니까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가만히 앉아서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결정을 미루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차일피일 이런저런 핑계 내세워 가지고 시간만 죽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빠른 시대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가경쟁력은 적기 확보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만 대 가지고 킬링 타임, 시간만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어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장관님께서…… 지금 원전·방산, 그야말로 현 정부의 경제의 성공 여부는 제가 봤을 때는 방위산업이나 원전이나 이런 데 대한 인프라를 제대로 제공해 주느냐 안 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이걸 직접 챙기서 가지고 관련 기관에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정책을 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추가 답변드리면요, 정말 저는 우리 지방의 산단을 발전시키는 건 지방균형발전의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창원산단 같은 경우 폐광이 발견됨으로써 늘어지게 되었고 또 그 부분이 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과 연동이 돼 있지 않은 오염이 발견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루빨리 용역을 해서 빠르게 그 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해서 정말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LH와 다시 한번 접촉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과 제가 책임지고 정말 힘을 모아서 이래저래 계속 딜레이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제대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리고 이런 주요한 국가 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림돌을 다 해소시켜 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문제되고 있는 걸림돌은 현 단계에서 풀어 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미래에 닥쳐올 그런 걸림돌은 그때 가 가지고 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가장 문제가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이라든지 돈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첫 단락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한두 달 내에 빨리 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국가전략사업 지정부터 먼저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종양 위원님, LH 사장직무대행 답 안 들으셔도 되겠어요?

○**김종양 위원** 저 시위소찬이라는 고사성어까지 동원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직무대행 나오셔서 입장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예.

○**김종양 위원** LH 직무대행님, 이 문제는 국토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그런 사항인데 지금 LH가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LH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다, ‘사업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지역에 많이 팽배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게 방산 아닙니까? 이럴 때 LH가 나서 가지고 뭔가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기업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박수만 치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한말씀해 주시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국가산단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그래요.

○**위원장 맹성규** 그렇게 하셔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나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김 위원님하고 LH하고 잘 하셔서 조속히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2년 동안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렇게 해 주세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다음,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수도 완성, 이재명 대통령 국정과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것 누가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장동혁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거지요. 대통령 국정과제에 대해서 야당이 전혀 이견이 없는 겁니다. 적극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 또한 행정수도 완전 이전, 완성에 관한 한 양치기 소년이 될 수도 있다, 희망고문만 하다가 임기를 마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것 때문이겠지요.

속도에 대해서 또 여야 간의 이견은 없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견이 없는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 이것 누가 얘기했습니까? 송언석 국회 원내대표. 그러면 민주당이 속도를 늦추자고 하는가? ‘세종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 이것 정청래 대표 세종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도를 내겠다는 데 여야 간에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서 편성 예산을 보면 부분 이전이거든요. 부분 이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예컨대 대통령실 같으면 총예산이 7680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3846억 원 투입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 건 5분의 3 규모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이고 국회의사당도 총 5.6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3.7조 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기획예산처가 국회사무처에 통보했습니다.

이렇게 부분 이전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이유는 뭐니까? 이유는 첫째, 근거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완전 이전하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완전 이전하는 근거법이 뭐지요? 행정수도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은 완전 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이라는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근거법이 마련되는 겁니다. 정부가 완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돼야 돼요.

또 하나의 걸림돌은 뭐예요? 위헌 논란이 있지 않나. 그 법이 통과되면 뭐 해요, 위헌 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확신이 없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공감대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뭐니까? 첫째, 행정수도특별법이 여야 간에 아무 이견이 없으니 빨리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입장이 뭐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데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겁니까, 소극적입니까? 빨리 통과시키는 데에 이의가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저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아무 이의가 없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원식 의장님의 주도로 개헌안이 발의되는 서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면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적 과반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서명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번 개헌이 우원식 의장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최소한의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수도 완성에 여야 간의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운하 위원 없잖아요. 그렇다면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안에 이 내용이 포함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쟁점이 안 돼요. 쟁점은 단지 헌법에 어떤 내용으로 이걸 담을 거냐라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수도에 관한 사항 법률로 정한다 하면 아무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개헌안 발의에 정부가 수수방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자면 행정수도특별법 4월 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당정청 협의해서 속도를 내야지요.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 개헌안이 지금 발의 서명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헌 논란 해소할 수 있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 답변 좀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 저희가 개입하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또 그 논의 과정에서 저희 역할이 있다면 더욱더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로 이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희 위원** 저는 보충질의까지 해서 7분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7분 하세요. 보충질의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연희 위원** 청주시흥덕구의 이연희 위원입니다.

오늘 장관님 답변이 시원시원합니다. 뭐 좋은 일 계십니까? 제 답변에도 좀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지금 서울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어떤 글로벌 분석업체의 분석에 따르면 소득 대비 집값이 25배나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뉴욕이나 코펜하겐보다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서울 집값이 소득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우리 20대, 30대 청년들,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절망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저출산 문제, 사회적 문제들이 다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함께 적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그래서 저희 정부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대규모 공급이, 그린벨트가 해제됐던 서리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 계획으로 하면 첫 분량이 2029년으로 돼 있고 35년도에 완성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에 지구지정이 완료되었어요. 또 2지구도 4월에 지구지정을 목표로 현재 사전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연희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서울 집값 높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서리풀은 특히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를 저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세에 한 칠팔십 % 수준에서 공급을 하게 되면 특히 지금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매우 크게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집값도 안정되는 이런 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계획이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취지

에 맞게 서리풀지구도 예외 없이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다만 어느 정도 돼야 될지는 좀 따져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따져 보실 텐데 청년들의 희망대로, 지금 현재 시세가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현재 시세의 한 칠팔십 % 수준에서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하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제 지역구가 청주인데 제가 속해 있는 충북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2019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했는데 여기에 충북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공기업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이전 역시 한 곳도 없습니다. 세종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보면 충북에 배치된 기관이 대부분 다 교육·연구기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시지요, 도표를.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다 보니까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 파급력이 매우 미흡해서 예산 규모도 매출액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는 형평성, 균형이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동의합니다.

○이연희 위원 그리고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도 많겠지만 국가 미래 그리고 국가 산업전략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전을 해야 되지요. 이전 대상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저는 한국공항공사가 이전할 때 세 가지 측면이 충족돼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국가균형발전의 측면 그리고 항공정책 효율성 측면 그리고 미래산업 성장 전략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을 충족하는 방향에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충북에는 청주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작년에 460만 명이 이용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국제선 이용객이 194만 명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전국 어디서든 한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한 교통 중심지이고 그리고 수도권권도 영남도 호남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KTX역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충북 청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사를 이전할 때 이런 측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공항공사가 14개의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리적 중심에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행정수도의 관문공항 역할을 청주공항이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국회의사당과 그다음에 청와대 집무실 다 이전하게 되면 외국 정상도 청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항공정책의 미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공항공사 부분은 충북 청주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요구들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적절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연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김도읍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어요?

○김도읍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김도읍 위원님 진행을 할 텐데요.

○김도읍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잠깐만요, 먼저 설명을……

오전에 김희정 위원님이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스티커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본인이 안 계셔서 본인이 출석하시면 국토부로부터 조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진행하십시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임기 만료로 이제 사장직을 떠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깊이 관여를 했더라는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 출범 초기에 이렇게 공기업에 대한 대통령실의 인사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저희들이 이학재 사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인사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반드시 다루어 보아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이학재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상임위 일정을 꼭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까 오전에도 김희정 위원님이 동일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간사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했냐 하면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저희보다는 운영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학재 사장이 주장한 대로 대통령실 얘기도 하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사실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사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가지고요 만일 문제가 있다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어디서 해야 할지……

○**김도읍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중간에 개입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니까 만일 그런 경우라도 저기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국토위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을 불러다가 진행을 한다면, 그것보다는 운영위에서 관련되는 사람들의 질의를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김도읍 위원** 그러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운영위에서 만약에 그 일이 성사가 되지 않는다면 국토위에서라도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예,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간사님과 논의를 한번 해 주시고 그 논의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한번 다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장관님, 부전-마산 복선전철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이것 언제 개통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시공사 측과 약간 견해 차이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 사조위를 구성해서 좀 더 명확하게 피난객 문제 또 격벽형 피난통로 문제,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일단 중지부를 찍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8년 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이를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28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이게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개통시한이 지금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년 반을 더 기다리라고요?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 답변을,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답변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도 아직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고 경남에서 부분개통 요구가 좀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분개통 문제는 협의를 진행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부분개통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부분개통에 대해서는 저는 조건부로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도 피난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지부진 이렇게 차일피일 하고 있는데 부분개통이라도 해 놓을라 치면 완전개통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더 안일하게 대처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심각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분개통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전에 완전개통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을 명확하게, 면밀하게 발표를 하시고 나서 부분개통을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우 단호하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분개통 문제에 대해서 할 때 위원님께 전체개통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한 후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작년 9월 7일 날 주택공급대책 발표하셨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도읍 위원** 그때의 내용이 뭐니까? ‘30년까지 수도권에 연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게 장관님께서 직접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진행……

○**김도읍 위원** 아니, 잘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여하튼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니 장관님, 노력을 최대한 하는 게 아니고요 잘되고 있냐고 여쭙보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 연 27만 가구씩, 벌써 작년 9월 달에 발표했으면 지금쯤은 손에 잡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한다는 게 1월 29일 날 발표한 게 태릉하고 과천하고 이렇게 몇 군데 해가지고 겨우 6만 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관계장관회의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예로 태릉CC 문제,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것 아닙니까? 불발된 것 아닙니까? 135만 호 공급대책 발표할 때도 문재인 정권 때 그 그대로 베껴 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했고 장관님은 12월 말 아니면 내년 1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태릉CC 등’ 이래 가지고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 때의 공급대책처럼 똑같이 발표를 했고 문재인 정권 때 실패한 것처럼 똑같이 주민 반발로 인해서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총량을 늘려야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은 경제학의 수요·공급 이론의 기본 중의 기본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런데 공급대책을 내놓으라 하는데 공급대책도 내놓지도 않고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께 무능하다고 하니까 왜 무능하냐고 따지거나 하시고.

공급대책 빨리 내놓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도읍 위원** 최선을 다한 게, 지금 장관님 취임하고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가시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말씀만 매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고.

공급대책 빨리 준비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장관님, 지금 최근에 무안공항 폐쇄 연장, 기간이 또 늘어났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지금 광주에서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워낙 불편함도 많이 겪고 계신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장관님한테 광주공항에서 바로 국제선 수속을 밟고 인천으로 가서 나갈 수 있는 내항기를 여쭙봤는데 여러 가지 광주공항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걸로 회신을 받았습시다.

최근에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그래서 제주에서 김포공항을 거치지 않고 인천으로 곧바로 가는 국내선이 주 2회 시범 취항했다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광주 같은 경우도 내항기는 안 되더라도 광주공항에서 인천으로 곧바로 국내선을 타고 가서 거기서 국제선 수속을 밟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의견 조정이라든가 또 상당히 오해가 증폭될 위험성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어쨌든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는 국내선이 취항을, 시범 운항을 시작하기 때문에 관광업계도 그렇고 광주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여쭙보는 거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장관님, 노란봉투법 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장관 취임하시기 전에 이것 관련된 법령 거부권도 행사했었고 통과되는 과정도 다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지난 3월 10일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날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밝히시기도 했고요.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분위기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다수가 노란봉투법 회피하기 위해서 수익의 비용을 들어서 컨설팅과 연구용역을 받은 정황이 저희 의원실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곳은 공항공사였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외부 업체

에 2200만 원 상당의 컨설팅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내용이 노란봉투법 대응 방향 그다음에 회피 방안이었습니다. 내용만 보고서도 좀 깜짝 놀랐었는데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공항회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리스크’라고 표현을 했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두 위주의 과업 지시 관행이 존재해 불법 파견 리스크가 내재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맨 오른쪽 보시면 ‘실행 및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그린 존에 보면 인력 배치나 승진·징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빨간색 박스, ‘사용자성을 전면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하라’ 이런 식의 대응 방식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PPT.

컨설팅 용역 보고서에 보니까 우측 맨 하단에 보면 ‘NotebookL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성형 AI 프로그램 워터마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공항공사에 ‘그러면 이 워터마크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찍혀 있었던 거냐’ 물어보니까 컨설팅 회사에서 결과보고서 제출 당시부터 이 워터마크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생성형 AI로 이렇게 컨설팅 보고서 받으려고 2000만 원 넘는 용역비가 나간 건지, 지금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3월 10일경 원청 교섭을 공식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는 뒤로 한 채 원청 교섭 대응을 위한 2억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그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PPT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공항공사 외에도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동일한 내용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5000만 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썼고 공항공사는 역시 2255만 원 상당의 노무 자문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라는 역할에 맞는 내용인지는 제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장관님,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번 답을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노란봉투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은 타당한 준비지만 노란봉투법의 그런 문제의식과 정신을 회피하기 위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대책이었다면 저는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발주한 산하기관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점식 위원** 장관님, 조금 전에 김도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때 1:29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서는 잘 준비해 보겠다, 최대한 하

했더라는 말씀만 하셨는데 하나하나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29 대책이 6만 가구를 2027년부터 순차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7년 착공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2030년 입주 가능한 물량이 몇 가구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시 한번, 언제 입주를……

○정점식 위원 제일 빨리 착공하는 것, 그러니까 27년 착공해서 30년 정도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 몇 가구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30년 입주요?

○정점식 위원 그것 가능한 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2934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3000……

○정점식 위원 3000가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과연 추진할 수 있냐, 있는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은 하신 겁니까? 상당수의 사업지가 수년째 이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초기 절차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어떻게 2027년 착공 가능하냐 하는데……

우선 착공지구의 각 지구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 방이2동 복합청사, 21년에 기공식까지 했던 사업으로 24년이 준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3년이 지연되고 공사비는 두 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LH와 송파구청 간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협의가 마무리됐습니까? 잘 모르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결국은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보면 내년 착공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리고 중랑구 면목행정복합타운 이것은 22년에 설계 공모를 시작했지만 공사비 급등으로 결국은 멈춘 상태고 발주처인 SH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설계 단계에서 수년째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 이 사업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 부지는 2019년에 추진을 했다가 역시 무산된 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사업도 역시 27년 착공이 전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사업들을 27년 착공 물량에 포함시킨 것이 과연 현실적인 판단이나 하는 데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위원님 말씀이 좀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급을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저희들 의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고 또 속도감이 안 붙는 문제는 있다고 저는 시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점식 위원 그런데 장관님, 이것을 발표하신 게 1월 29일입니다. 불과 지금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두 달 전 1월 29일에는 이것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두 달 후에 와서 말을 바꾼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점식 위원 아니, 저는 말 바꾼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또 기관 간 조정해야 되는 기타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 참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점식 위원 그래서 저도 장관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장관님께서 불과 착공을 한 9개월, 10개월, 길게는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정말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두 달 전에 내년 착공이 가능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국토부 앞에서 과천 경마공원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보셨지요? 이게 PPT에 나온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도 기존 개발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 9800가구까지 더하면 교통 인프라 감당이 가능하겠나, ‘주택 폭탄이고 교통 지옥이다’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고 과천 시의회도 이것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 그리고 국제업무지구 기능 약화를 우려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서울시와 용산구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그리고 강남구청 개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행정자산 활용의 비효율성과 주민동의 절차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저……

○위원장 맹성규 2분 쓰시고 다음에 안 하시게요?

○정점식 위원 5분도 아예 안 해야 됩니까?

○위원장 맹성규 예.

○정점식 위원 마지막 3분이 아니요?

○위원장 맹성규 좋습니다. 먼저 하시고요. 마지막 3분은 나중에 드릴게요.

○정점식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그리고 태릉골프장 부지 역시 정부 대책에 대해서 노원구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낸 입장문에서 지하철 6호선 연장 등 교통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 임대주택 법정 최소비율 적용 등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정점식 위원 받으신 것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결국은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면 6만 가구 계획의 출발점은 내년에 착공할 한 3000가구, 그나마 설계, 공사비, 시공사 갈등으로 지연되고 지자체 반발도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주민 집단행동도 현실화되고 있고 교통 인프라 대책 미확정으로 이게 사업 지연이 그냥 눈앞에 보인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구조에서 정부에서 1·29 대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27년 착공 그리고 6만 가구 순차 공급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특히 수도권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장관님께서 제 이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과연 그것을, 지금 해소 방안을 제기하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저희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기관의 의견 조정 또 아까 말씀 주신 주민들의 반발 속에서 주민들의 교통 문제라든가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든가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를 이끌어 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좋겠다.

다만 국토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과거와 달리 공급 관계장관회의라든가 또 제가 기관 차관급은 거의 다 개인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또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맞추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통, 정주여건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점식 위원 마무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하십시오.

○정점식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지금까지 국토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가장 중시하는 게 소위 공공 중심의 개발입니다. 그런데 공공 중심의 개발만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렇다면 왜 민간 주도 개발, 민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위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저희 이재명 정부가 공급 문제에 있어서 공공 주도, 공공만을 가지고 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간에서도 뭔가 공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은 좀 알아 주셨

으면 좋겠고요.

다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는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 이외에 큰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리고 그 이견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장관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도읍 위원님 질의에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부전-마산선 문제 때문에 지난 2월 6일 날 창원에서 타운홀 미팅 때 그때 장관님 계셨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때 대통령께서도 그 민원의 답변에 대해서 ‘조기에 개통을 하겠다. 그리고 부분개통에 대한 문제도 연내에, 빠르면 상반기에 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에서는 ‘내년 상반기가 돼야 부분개통이라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상반기라고 표현했다면 잘못된 거고요. 제가 1월이라고 표현해서 연내에 마무리해서 한다는 의미고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연내 개통은 차이가 없습니다.

○민홍철 위원 글쎄요. 그 이유가 사고조사위원회 결론을 보고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러면 대피갱 자체의 사고 조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설계변경을 할 거냐 여러 가지가 아마 결론이 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완공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마산에서 강서금호역까지는 다 완공이 돼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것은 현재 시설 점검, 한 달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 부분개통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주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부분개통을 해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날 때까지 대피갱의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할 거고. 그런데 왜 부분개통이 그렇게 늦어집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저희가 부분개통을 늦게 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어서 기술적인 설명은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분개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절차 그리고 추가 시설물을 시공해야만 부분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홍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아마 작년 1년 전부터 계속, 그전부터 그랬을 거예요. 경상남도에서도 건의를 해 왔고요. 그러면 부분개통이라도 해서 마산에서 강서금호

역까지라도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운홀 미팅에 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조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를 보고 부분 개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할 것인가를 결론을 내겠다고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조위를 통해서 피난쟁 문제와 격벽통로라고 하는 이 문제가……

○민홍철 위원 그것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걸 통해서, 그게 명확해져야만 완전개통을 할 수 있는 공사를 제공할 수 있고요.

○민홍철 위원 아니, 완전개통이 아니라 부분개통을…… 지금 부분개통은 가능하지 않 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부분개통은 부분개통에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를 해 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민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1년이나 걸리냐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분개통에 어떤 기술적 문제와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민홍철 위원 그걸 분리해서 해결해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지금 완전히 분리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홍철 위원 사조위하고, 사조위는 사고 원인과 대책이고요. 부분개통을 할까 말까는 철로가 이미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역도 지금 다 돼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러면 전동차가 모자란 거냐, 뭐가 잘못돼서 부분개통을 못 하겠다는 건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분리 대응을 좀 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현재 분리 대응이 원칙이고요. 사조위를 통해서 피난 쟁 문제와 격벽 시공하는 문제에 대한……

○민홍철 위원 그것은 사조위에서 하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명확한 판단을 통해서 하겠다. 부분개통은 부분개통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부분개통에 필요한, 실무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 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어느 만치인지 정해지면 부분개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이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하 기 때문에 또 매우 기술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철도국 주관으로 해서 위원 님과 부산·경남 지역의 의원님 및 관계자들 있지요. 또 기술자들에 대해서 전체 확대위 형식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부분개통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행정절차를 최소한 빠 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조위예요 SK, 기업체 당사자가 참여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참여 안 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던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사조위 위원으로 참여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SK 측하고 그다음에 저희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논의를, 가능한 근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제가 듣기에는 원안대로 결론이 나 버리면 그 업체가 시공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사조위에서도 원안 설계대로 하라 그런 결론이 나 버리면 결국 이견 못 한다는 거지요, 업체가 수용성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그걸 유념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위원장 맹성규** 예.

○**민홍철 위원**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민홍철 위원** 부양선은 예타가 진행 중인데 제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께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제가 거둬 장관님께도 말씀드리지만 부양선의 경우에는 B/C가 0.4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도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내륙 순환 광역철도는 현재도 예비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철도가 놓여져야만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동남권의 30분 소통 이게 완성이 되는 키 철도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철도국장께도 충분히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관심을 꼭 좀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순서가 중간에 오서 가지고 백도는 안 될 것 같고 김희정 위원님은 위원님들 몇 분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원래 제 순서에 하면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원래 순서가 아니라 바뀐 순서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다고요.

○**김희정 위원** 제가 26번입니다. 원래 순서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죄송한데 이게 막 섞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를 해 드릴게요, 순서대로 하고.

그러면 김은혜 위원님은 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은혜 위원** 숨 돌릴 시간을…… 누구 한 분만 하셔도 될까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박용갑 위원님 다음에 하세요.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박용갑 위원님, 하실 수 있겠어요?

○박용갑 위원 저도 다른 분 한 분 먼저 하시고……

○위원장 맹성규 지금 위원님들이 바쁘서 가지고 그러는데……

김정재 위원님, 어떻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정재 위원 준비는 안 됐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하시고 김은혜 위원님 하시고 박용갑 위원님 그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장관님, 오늘 사실 국토부장관 오셔 가지고, 민생하고 가장 관련된 게 아마 주택문제일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주택문제가, 이걸 도저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강남 집값이 뛰었습니다. 그렇지요? 뛰었는데 이것을 잡겠다고, 절대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면서 잡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해 줘야만 이게 잡히는데,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관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민간·공공 가리지 않고 모두, 민간이나 공공 양측에서 다들 공급정책들을 촘촘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정점식 위원님께서 민간 공급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아시지요? 서울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 포션, 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주택공급에 있어서? 서울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습니까, 민간 부분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퍼센티지는 정확히…… 한 65 되나요?

○김정재 위원 65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90% 됩니다. 거의 다 민간입니다. 지금 이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이 나라가 난리가 나고 대통령이 연일 매일 페이스북에 쓰는데 이런 것조차도 장관님이 파악을 못 하시면 이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내버려두고, 아까 그랬지요? 이 민간 부분을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이견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책임을 국회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법안소위에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상정조차도 안 시켜 줘요. 온통 공공만 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표 정책이라면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의 출처가 될 수 있는, 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국회로 책임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에서 하는 것, 아까 정점식 위원님께서 2027년 착공 예정 사업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금 완전히 파악하셨습니까, 장관님? 27년부터 착공을 개시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그리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곳들도 많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양쪽 다 구별돼 있습니까? 언제 27년부터 착공하는지 핵심 사업들 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세부적으로 27년도에 착공하는 물량이 어떤 거고……

○김정재 위원 다 알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렇게까지 다 지금은 기억 못 하지만 분리는 돼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것을 기억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서울의 주택정책이 장관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실질적인 공급,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입주가 가능하겠냐고요. 입주 가능합니까? 이번에 1·29 대책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입주가 가능하겠냐고요, 임기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가능한 물량도 있고요.

○김정재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디가 가능합니까? 어느 동, 어느 유희부지, 어떤 공공청사 또는 어떤 부지,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맹성규 누구 대변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자세한 건 주택공급본부장이……

○김정재 위원 아니, 좋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들 다들 한번 보세요. 적어도 장관이 되면, 1·29 대책 갖고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임기 내에 어느 지역에 몇 호 정도는 공급이 있네라는 것은 장관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7년 착공 예정 사업지 한 군데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적어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착공하기 전의 전 단계로 뭐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설계나 설계 공모 기간, 공모 이런 단계 하나도 거치지 않았어요. 착공도 지금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적어도 입주를 어디에 얼마나 한다면 것은 머리에 꿰고 계셔야지요. 이게 수천 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가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 서울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관님. 장관님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고요. 지금 주택정책을 바라보는 장관님의 태도, 그런 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말만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 가지고 정부의 시장에 덤비지 마라, 집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협박이나 하고. 그렇게 협박할 것 같으면……

이번에 정책특보 이한주 씨 아시지요? 이한주 정책특보 아십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재 위원 그 사람 집 몇 채 가지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잘 모르겠는데요.

○김정재 위원 서울하고 분당 일대에 집 열 채 이상, 열 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3월 27일 날 정책특보로 임명이 됐습니다. 양심이 있어지요. 그렇지요? 온 국민을 향해 가지고 다주택자들 집 팔라고 협박하고 이러면서 정책특보가, 집 열 채 가진 이런 사람들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한 이런 사람 임명하고 있다고요. 어린이날 자기 초등학교, 중학생 애한테 영등포 재개발 예정지 상가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표리부동해요. 제가 정치적인 이런 얘기는 안 하더라도, 차치하고라도 실질적으로 적어도 1·29 대책을 내놓았으면 여기에 맞게끔 꼼꼼히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하고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과연 시장을 이길 수 있을지, 대통령 말씀에 부합되게 하려고 그러면 장관님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꼼꼼히 살펴서야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정재 위원 장관님, 답변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챙겨서 꼭 부동산 안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다음에 회의가 열릴 때는 다 파악을 하고 오세요.

뒤에 뭐 하십니까? 장관님 답변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자료를 주셔야지요. 기강의 해입니다. 제가 봐서는 이미 시장이 정부를 이겼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순서대로 오전에 질의 못 했던 전용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 못 했어요.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하세요.

○전용기 위원 장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우리는 뭐 장관 없애고 컴퓨터를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외우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전용기 위원 장관은 정책의 결정자지 데이터 암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 다 못 외운다고 잘못된 것 아닙니다.

의사결정 잘 하셔서 집값 좀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장관이 모든 착공 숫자 외우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에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주거정책을 쌓아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필요할 때 정확히 보고받고 책임 있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정도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급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게 부동산 안정에 있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업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급 문제요?

○전용기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시스템을 약간 변화를 줬습니다,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실제 이 문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공급을 추진하는 주체, 정부 내에 이견이 있으면서 기관 간 조정이 잘 안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행정절차를 너무 느리게, 천천히 가는 경우에 대해서 빠르게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요구, 특히 교통 문제라든가 정주여건 개선과 같은 그런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잘 화답해서 잘 정리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끼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행정절차를 계속 간소화시켜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정부 부처 내의 이견이라든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지금도 계속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거의 차관급 인사는 제가 개인적으로 다 접촉해서 상황 설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요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문제도 있고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가 최선을 다해서 정리해서 빠른 속도로 공급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기 위원 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정책질의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은혜 위원 장관님, 서울 아파트 공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됐습니다. 18.67% 올랐거든요. 5년 내 최고치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아니요, 알고 계십니까라고 제가 여쭙봤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공시가격 산정 어떻게 하는지 산식 아세요? 어떻게 공시가격이 나오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산식을 구체적으로 제가 막 설명하기는 그럴 것 같은데요.

○김은혜 위원 산식 복잡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걸린 문제인데 장관님, 이 정도는 AI가 아니더라도 아셔야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모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실거래가에다가 현실화율 곱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대체로 시세에 연동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주로 시세를 반영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3년 전부터 그 수치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부동산원이 작성한 주택가격동향조사가 있습니다. 그 통계를 보면요 서울 집값은 8.9% 정도만 올랐는데 공시가격은 18.67%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10%나 뽀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 보시거나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고개를 끄덕임)

○김은혜 위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의원실에서 무작위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조사해 봤는데 서울 화곡동의 한 아파트가 24년 7월에 국토부가 밝힌 실거래가가 10억이었는데요 25년 11월까지 실거래가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5억 7000에서 6억 3000으로 1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시세만 반영한 거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은혜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일단 말씀하신 논리적 근거에 보면 시세가 변한 게 없는데……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올랐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왜 말이 안 될까요? 지금 공시가격이요 부동산원에서 현장실사부터 검증까지 진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지요. 국토부 산하 공직자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원에서 현장실사하는 건 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다 나서서 세금 올리겠다고 하면 눈치 안 보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쉬쉬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실거래가 대신 매물 호가, 즉 다른 근처의 동네에서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은 가격 끌어다 반영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조세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 말씀대로 3년 치 현실화율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면 시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희가 장표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3년, 24년까지 집값이 한 4000만 원 정도 오르니까 공시가격도 연동해서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0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공시가격도 유지가 되다가 유독 올해만 6.3억으로 뽀 겁니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 논리적 근거로 보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은혜 위원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사라지면 이 아파트 살고 있

는 은퇴자는 30% 넘게 세금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국민이 봉인 거지요.

재산세 고지서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국민들에게 언제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 6월쯤 나오지 않나요?

○김은혜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6월에 나오지 않나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김은혜 위원 6월 3일 전이겠습니까, 6월 3일 후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김은혜 위원 7월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7월입니까?

○김은혜 위원 공시가격 오르면 건강보험료 같은 준조세가 따라서 올라가요.

제가 질의응답 멈추고 67개라고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가진 게 평생 땀 흘려 모은 집 한 채인데 이렇게 되면 세금 내다가 끝나게 생겼어요. 이게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조세 수용성의 원칙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서 국민들의 과세 부담 줄이겠다’ 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지요? 잘 들어 보세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해서 국민들의 과세 부담 줄이겠다’ 어디서 들어 본 말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정부의 정책인데요.

○김은혜 위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지났다고 공약을 파기하고 있는 거지요. 공시가격 올리고 과세 부담도 크게 늘렸으니까요.

공시가격 제도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일단 제가 지금 위원님 말 들으면서 좀 헛갈리는데요.

○김은혜 위원 제 시간을 잡지 마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 제도 언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또 공시가격 현실화를 올리실 건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내리실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계속 이어 온 정책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부에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정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문제는 실거래가가 올라가지 않은 조건에서, 그러면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맞거든요. 그랬을 때 부동산원에서 실제 이 조사를 성실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따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공시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책은 윤석열 정부 이래 똑같이 저는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2분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따 깎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5분 못 쓰시는 거예요.

○김은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제가 추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보충질의하세요.

박용갑 위원님.

○박용갑 위원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저는 질문 요지만 딱딱딱 하고 답변은 이제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간단하게. 철도교통은 우리가 일반 도로교통과 좀 달리 간선철도와 연계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래서 철도교통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충청권 광역 철도 1단계 사업이 지금 이제 적정성검사를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기획예산처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6월 달에 열 계획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타당성 재검토 중입니다.

○박용갑 위원 그래서 6월 달에 이 위원회가 열리면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다음에 CTX 문제입니다. CTX 문제는 대전의 CTX가 정부종합청사에 서 청주공항까지 가고 조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런 노선인데 이 CTX 종점을 정부종합청사에서 서대전역으로 한 5km 정도 더 이제 연장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도 김태병 철도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부청사보다는 서대전역이 B/C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지만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KTX하고 SRT하고 통합이 언제쯤 되지요? 완전 통합이 12월이었는데 이제 9월 정도로 이렇게 당겨지는 걸로 알고 있더구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가능한 그렇게 좀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서대전역 같은 경우가 인구 팽창으로 인해서 교통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수서발 KTX를 좀 증편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통합이 되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다음에 LH에서 보면 일반 수급자들에 주거급여를 해 주고 있어요. 주거급여 그게 총예산이 한 3조가 넘게 국토부 예산이 있고 한 1600 정도가 이제 수선유지급여가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수급자들이 요청을 해서 수선을 하게 되면 하자가 발생하는데 이 하자가 제대로 되지
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 예산이 너무
적고 또 담당하는 직원들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대덕산단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전국에 보면 노후 산단이 굉장히 많
습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노후 산단 재생사업이라든지 또는 경쟁력 강화
사업이 각 부처가 연계가 돼서 하고 있어요. 이게 20년, 30년이 넘은 노후 산단들이 많은
데 이럴 때 이게 제2의 또 제3의 그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
단 점검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 주시는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박용갑 위원 그리고 아까 송기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전세버스 유가보조 문
제도 지금 국토부가 유가보조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데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전세버스가 한 칠팔십 %가 통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
어요. 그러니까 통학과 관광 이것과 잘 구분을 해서 이것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그리고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정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요 김희정 위원님이 오전에 문제 제기해 주신 항공
안전감독관 차량 스티커 관련해서 자료가 배포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본인이 오시기를
기다리셨거든요.

자, 항공실장 나와서 문제 제기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입니다.

오전에 김희정 위원님께서 항공안전감독관 차량 스티커 관련 지적을 하신 사항이 있습
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는 공항에 프리패스가 가능하냐에 대한 사항입니다.

감독차량 스티커만으로는 공항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공항 출입차량 스티커와 별도로
첨부물에 붙어 있는 공항출입패스를 발급받은 후에 차량과 운전자 모두에 대한 보안검색
을 통과해야만 공항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분실은 2월 5일경에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조치 계획입니다.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티커는 기존의 감독차량 스티커를 즉시 폐기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한 후에 이탈되지 않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관련자, 곧 스티커 분실자와 또 국회에 대응했던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파악한 후에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에 엄중 경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스티커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것은 질의 시간하고 별개니까요, 위원님 혹시 또 의문 가거나 하는 것 말씀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으로는 관리가 안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차량 3대에 된다고 지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탈부착이 가능하더라고 얘기해서 등록된 차량만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차량에게 가능하고 보안구역 중에서, 잘 아시지만 그때 우리 공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A, B, C, D 구역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구역까지도 가는데 그러면 그 이외에 지정된 차량이 아니라 탈부착을 했을 경우에 다른 차량으로 바뀌어도 가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부착이 떨어졌으면 3대 중에 1대는 그동안 약 한 달 넘게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그 업무를 누가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한 차량대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혀 보관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등록된 차량이 3대로 압축이 되는데 그 3대 중에 어느 차량에서 분실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제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뒤져서 이 정도를 알고 여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방금 대답하신 수준은 이것을 전혀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지금 김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제가 볼 때는 다 공감하고 어떻게 보면 주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보다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봉합 수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감독차량에 대한 운영상태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래서 실장님이 책임지고, 실무적으로 장관님이 이것을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을 거고, 개선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차기 회의 때는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문제 제기한 내용이 안 담겨 있잖아요. 그렇지요? 3대 중에 뭐냐? 그리고 스티커 같은 걸 분실했을 때 운행을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이것 사람까지 점검을 해야지요. 이게 차량이 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관을 위한 운용차량이잖아. 그런데

운용차량에 아무나 다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가능성이 보여진 것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의원실에서 한 것 자료 좀 받아서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개선안을 마련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아까 제가 실물 크기를 보여 드린 이유는 그냥 스티커라고 얘기하면 조그마한 걸로 생각을 하실까 봐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맹성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서 떨어진 거예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공항 관계자들에게……

제가 아침에 발견한 게 오전 6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저녁 11시대까지 누구도 찾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장에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관제탑까지도 갈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6시에 떨어졌는데 그 차량이 낮에 막 돌아다녀서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께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그 큰 스티커만 있으면 보안구역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희정 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스티커 이외에 차량 앞에도 하나 더 붙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차량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매칭을 하거나 또는 사람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일체 없었습니다. 그렇다라면 밖에 있는 이렇게 큰 자석 스티커도 떨어져 있는데 안에 있는 종이 정도 복사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작업입니다. 그러면 방금 주운 것 정도도 카피하기 힘들지만, 창 앞에 놓는 것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는 컬러 프린터기 해서 언제든지 보안구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이런 거예요.

지금 장관님이 문제 제기하신 것도 맞아요. 다른 보완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이렇게 부착된 차량만이 별도의 인적, 차량 앞에 다 붙이는 것 그런 표식하고 2개가 같이 확인이 돼서 다녀야 되는데 차량 스티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상태에서 차량 안에다 놓는, 밑의 것 이 표식만 갖고 다니는 자체가…… 그러면 차량 바깥에 별도로 구분해서 스티커를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3대가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은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스티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매칭시키는 문제…… 사실은 이게 스티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독관 본인의 저거든. 감독관이 중요하지 차량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실질적인 내용이. 차량은 감독관이 이용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수단하고 감독관하고 다 매칭이 돼야 되니까 그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바로잡으면 되는 거지요.

제도개선 사항 마련해 보세요, 점검해 보고요.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주종완** 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개선방안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우연치 않게 공항 가서 김 위원께서 찾으신 거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계기로 해서 제도개선 사항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보세요.

다음에 김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정 위원** 김희정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위원회에서 26년도 정책금융 계획 252조 원 발표를 하면서 150조 원은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공급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이 중에는 국토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분이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장관님, 정부가 전 부처 합동으로 해서 정책금융 252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중에 5대 분야를 꼽아서 발표를 하면서 한 분야에 국토부 돈이 2조 1100억 원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보고받으신 적이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런 정도만 보고받았고요. 제가 세부적인 이해를 하거나 또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김희정 위원** 2조 정도는 꺾값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돈이 적어서는 아니고요.

○**김희정 위원** 그러면 정부가 합동으로 정책금융을 이렇게 큰돈으로 발표를 하고 크게 대대적으로 보도자료 내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잠시만 시간 좀 끄고, 누가 답변할 수 있는지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사업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돼요.

기조실장이 답변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기조실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기조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난 2025년 12월 달에 금융위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국토교통 분야 2.1조가 현재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자료를……

○**김희정 위원** 지금 기조실장 영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금융 5대 분야, 47개 부문 공급계획, 국토부에 2조 1100억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남영우 2.1조입니다.

○김희정 위원 26년도 계획을 25년 12월 24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본 드릴 테니까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미 제가 국토부에 이것 문제 있다고 알렸는데 장관이나 기조실장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2조 1100억 원을 국토교통의 디지털 전환 사업에 하겠다라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금융위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책금융 준비를 국토교통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단순히 모르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아예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융위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패스하고 그냥 발표를 한 겁니까? 정부가 거짓말로 발표를 한 겁니까?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남영우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희정 위원 장관님 답변하세요. 금융위원장에게 가서 따져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왜 국토부장관도 모르는 정책금융 국토부 내용이 금융위원회를 통해서 발표되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책금융에서 우리 국토부에 약 2조 원 정도로 배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내용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드론사업이라든가 자율주행……

○김희정 위원 그래도 활동 내용을 준비하면 준비해야 되는 부처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부가 준비해야 되는 거지요.

○김희정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다가 계획이 뭔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우리 부처에서는 금융위로부터 수요 요구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요청 수요가 없어서 금융위로 제출하지 않았습시다’라고 서면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도 요청한 적이 없다라는 답이 왔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정책금융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그러면 국토부 당신들은 이 정책금융 어떻게 활용할 건지 했더니 ‘우리 부처랑은 관련이 없습니다’라고 답이 왔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

○김희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조사는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 서류에 금융위에서 정책금융……

○김희정 위원 국민에게 허위정보를 발표한 것 아닙니까? 두 부처가 함께 합동으로 했는지 한 정보 미스인지는 모르겠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아니까요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허위보고라고 하는 것은 좀 빠른 얘기니까요.

○김희정 위원 허위보고지요, 허위보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이미 지금 나와 있는 서류로 허위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허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부처에서 온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은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김희정 위원 서류를 보고도 조사할 능력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국토부하고 금융위 간에 이렇게 서로 자료 이견이 있다고……

2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제가 5분을 나중에……

○김희정 위원 예, 2분.

○위원장 맹성규 2분 쓰세요. 마무리하시고 5분 나중에 못 드린다고.

○김희정 위원 국민에게 허위정보를 알려 준 걸로 알려지고요. 저는 국토부에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린 바 있는데 오늘 담당 장관님과 기조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오지 못한 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정부의 큰 돈을 발표할 때는 주무부처의 여러 단계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어떤 단계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금융위가 허위로 발표를 했다면 금융위에게 항의를 하시든지 바로잡든지 보도자료로 수정하든지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부처가 합동으로 국민들에게 허위정보를 알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우리가 상임위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역시 금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주담대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전혀 실시간으로 보고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의 원인 중의 하나가 샌드위치 패널의 관리 사각인데요. 이게 혹시 품질인정을 취소하게 돼서 제품판매정지 처분을 내리면 시중에서 판매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 되겠지요.

○김희정 위원 그런데 실제로 난연성능 부적합 판정을 건기원에서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관리 기준에 의해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2개를 서류상으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매정지가 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재인증해야 되는 최소한의 제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이 두 제품의 경우는 그 재인증 제한 기간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4개월을 했는데 부적합일로부터 3개월 지나자마자 바로 다시 인증을 취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희정 위원 이것도 장관님 소관 업무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희정 위원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관련된 사업이라 더 유념 있게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역시 다음번 상임위 전까지 빨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 위원님이 주신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확인해 가지고 가능한 바로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위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건기원이 모니터링 부서와 인증 부서가 다르다, 인증하는 부서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서 같은 기관 안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가 만든 법 자체가 현장에서 무용지물 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큰 화재사고가 있었던 만큼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국토교통 디지털 전환 2조 1000억 지원하겠다는 거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아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누가 봐도 이런 수요조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국토부의 의견을 묻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면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내일 회의가 됐든 준비가 되는 대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 주세요.

질의가 끝나서 우리 간사님 두 분 질의를 듣고 잠시 휴식했다가 오늘 회의는 이제 간사님 두 분 끝나면 위원님들 한 번 다 질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듣고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밤 12시까지 하신다면서요.

○복기왕 위원 의지가 그렇다는 말씀이니깐요, 그냥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위원장 맹성규 맞아요. 원하시면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욱 간사님.

○이종욱 위원 장관님, 지금 강남 3구 집값이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매우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세가 어떻습니까? 꺾였습니까?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의 부동산 가격이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3구 제외하고는 상승세이고요. 다만 상승세가 좀 꺾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서울 쪽은 증가율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오르고 있고 특히 외곽 지역 중심으로 15억 키높이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전세가 산정의 기본이 집값이다,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결국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한테 이익이다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장관님 뭐가 더 중요하세요? 매매시장이 더 중요합니까, 임대시장이 더 중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둘 다 중요한데 매매시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산이 있는 분이고 임대시장은 집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니까. 국토부장관님의 1차 미션이 뭡니까? 국민 주거안정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매매시장이 중요해요, 강남 집값 떨어뜨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무주택자들 전월세 대책 세우는 게 더 중요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뭐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종욱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를 장관님 그렇게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 집값 통계만 보고 고통받는 서민의 눈물을 못 본다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강남 집값 몇 퍼센트 떨어뜨리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소득층의 월세, 전세 고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시장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세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 월세도 한 30% 물량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가격도 한 10% 이상 늘었고요. 월세가 평균적으로 서울 시내 151만 5000원, 역대 최고를 갱신했습니다. 월급의 36%가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대학생 원룸 옛날에 30만 원, 40만 원 하던 게 요즘 80만 원 가지고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매물은 씨가 마르고 대출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전세 갱신 계약률이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갔는지 아세요? 30%대가 지금 55%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들이 뭐 좋아서 계속 갱신하면서 눌러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옮길 수가 없어요.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안 나오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지 압니까? 평수를 줄여서 가든지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예’가 아니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대시장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요인이 뭐지요? 아까 제가 매매시장, 임대시장 말씀드렸지요. 임대시장의 물량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 자체도 줄어 있지요, 역대적으로? 지금 몇 만 가구가 줄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 줄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다주택자 규제하면서 그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넘어가니까 임대시장의 물량은 당연히 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주니까 전월세 가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가짜 뉴스다 이런 말씀 하신 거 기억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게 맞는 말씀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없애면서 생기는 문제는 실제 총수에서 변화가 없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종욱 위원 아니, 그 말이 맞으려면, 물량이 임대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임대시장에서 매매시장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문제하고 저는 그건, 예를 들면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으면 집을 사 가게 되면 전세 수요는 하나 더 줄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종욱 위원 제 말은 사 갈 돈이 없다는 겁니다. 사 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 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그러면 계속 강남 집값이 저렇게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자는 얘기잖아요.

○이종욱 위원 아니요. 저는 공급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다주택자 때리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피해받는 것은 전월세 임대 사시는 분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런 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종욱 위원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다음에 복기왕 감사님.

○복기왕 위원 장관님 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잠시 긴장했던 분위기를 좀 푸시고.

장관님 참 힘드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복기왕 위원** 참 어려운 자리에서 참 어려운 답변들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에 많은 우리 민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들이 그냥 한 분 어깨에 딱 이렇게 놓여진 것처럼 보여서 저도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 꺾이지 마시고 곳곳하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국토부 장관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사실 다 알기 어렵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चना 이런 거 관련해서 선거 때 후보자 간 토론할 때 수चना 물어 보면 사실 서로 좀 화도 내고 노골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 드린다는 차원으로 우리의 질의가 오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아까 야당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우리가 공시가율을 건드렸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 건드렸습니다.

○**복기왕 위원** 안 건드렸지요? 69% 내에서 그냥 그대로 고정돼 있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래서 공시가를 우리가 공개하고 나서 열람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지요. 혹시라도 내 집이나 우리 마을에 잘못 계산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뜻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그래서 아까 특정 어느 아파트의 사례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잡으면 되는데 마치 이것이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시가율을 높였다는 것으로 오해될까 봐서 제가 재차 다시 확인드립니다. 공시가율 지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까지 건드리지 않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GTX-C 노선 관련해서 협상 잘 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협상,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복기왕 위원** 지지부진하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복기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좀 걱정스러워서요. 결국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이 진행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정말 위험한,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 국내 기업들 자재비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국내 기업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지금 찾고 계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현재 찾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공사비 물가 협약을 통해서 물가가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제일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GTX-C 문제가 좀 더 복잡했던 것은 민자 사업에 대한 대책이 미진했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한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건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건설업체들 사실 전부 다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상태면. 그래

서 긴급하게 우리가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해 달라라는 요구들이 많았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에서 먹고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정말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데 외국에서 공사하고 있는 우리 건설업체들 많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 기업들이 어떤 협약을 통해서 제대로 공기 내에 완수하지 못할 경우에 페널티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호를 국가가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기왕 위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특히 중동 국가가 왕정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단 이번 추경에도 법률 컨설팅 비용을 해서 법률적으로 컨설팅을 지원해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다만 좀 심각한 건 공사와 직접 연동이 안 돼 있는 간접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저도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2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복기왕 위원 우선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이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국제표준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조건의 19조 2항을 보면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당 발주처에 알려 주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약속들에 대한 이행이 면제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조속하게 시행을 해야 될 텐데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복기왕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우리 기업이 철수하게 될 경우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과 연동돼 있는데……

○복기왕 위원 철수뿐만 아니라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간접비와 관련해서도 지난번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아주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간접비, 예를 들어서 공사가 멈췄을 때 거기 있는 직원들, 장비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외교 협상을 통해서 받아 냈다라는 그런 성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사 삼아서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한, 특히 국토부는 건설 분야 기업들부터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저는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다음번 우리 상임위 때는 ‘이러이러한 조치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외국에 나가서 보호받습니다’라는 말씀을 장관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당히 들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장관께서 직접 대통령께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루가 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쟁과 관련된 우리 민생현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혹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든 이 전쟁으로 인한 부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리 행정직원이 창문을 열어 놓은 것 보니까 좀 쉬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성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현 위원님,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송기현 위원 장관님,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송기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발의한 폐철도 및 유희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폐철도 유희부지가 대략 한 30만㎡이기 때문에 서울시 면적의 한 절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활용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산책로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용하고 그런 정도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활용되는 사례 봐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거기에 따라 하

거나 아니면 매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 따라서 거기에 응해 가지고 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굉장히 이 많은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게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물론 사용을 하겠다는 민원도 있지만 그냥 방치되는 것 때문에 환경에 피해가 있다, 안전이 위험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 내용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환경피해,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출되는 우리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16년도에 민원이 1100건이었다가 지금 1300건이기도 하고 17년도에는 관련 예산, 그러니까 안전조치 및 자산관리 예산이 51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142억까지 늘어났어요. 25년도에 152억까지 늘어나고. 그냥 방치함으로써 생기는 예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직까지는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이것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없고 그때그때 요청이나 이것에 따라서 활용한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큰 많은 땅을 활용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만 계속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현상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또 도심지를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도심지가 폐철도가 되면서 도심지에 있는 유휴부지도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단순히 산책로나 이런 것만 만들지 말고 청년창업 공간으로 그것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시설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영구축조물을 세우는 것이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또한 이게 5년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간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국가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하자는 취지로 제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황운하 위원 장관님, 오전에 말씀드린 행정수도특별법 관련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 국토부의 입장은 법안 내용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황운하 위원 법안 내용에 이견은 없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러면 법안은 언제 처리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런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언석 원내대표도 ‘속도를 내야 된다’, 정청래 대표도 ‘속도를 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법안소위에 상정된 순서는 맨 꼴찌였거든요.

정부에서 빨리 처리해 달라고, 여기 여야 간사님들 다 계신데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안건 상정이 되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해 달라고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부탁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운하 위원 그렇게 되니까 정부가 진정성은 없으면서 자꾸 말로만 하는 걸로 비쳐지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만큼은 진심이다,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좀 믿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을 믿게 하려면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여야 간사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정부의 입장도 이러하고 또 여야의 지도부가 똑같은 입장인 만큼 늦어도 4월 안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 공약만 내세우고 실제로는 돌아서면 모른 채한다는 그런 불신이 이번에 제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같이 협조해 주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지난 국감 때 제가 폐기물 시멘트에 대해서 질의한 것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용하는 주택에 폐기물이 혼합된 시멘트가, 레미콘 형태로 사용이 되겠지요. 레미콘 형태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주택 사용자, 주택을 실제 사용하는 소비자들 국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폐기물 시멘트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됐는지, 성분이 어떤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소비자로서의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 알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선택은 국민들의 몫인데 어쨌든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주택법을 개정해서, 주택 사용검사권자가 지자체장이더라고요, 기초단체장들. 지자체장들이 건설사로부터 그것을 제출받아 가지고 건설사가 그것을 제출하고 자치단체장이 이것을 공개하는 내용이 주택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개정안에 왜 이렇게 정부가 소극적입니까?

이게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시멘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려 달라는데 왜 정부가 이것에 소극적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소극적인 건 아니고요.

○황운하 위원 계속 장관님만 소극적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 실무자들은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한국기술표준원에서 그 서식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미콘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황운하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면 레미콘으로 들어올 때……

○황운하 위원 레미콘 납품업자가 납품서에 그것을 기재하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정리한, 그렇지요.

○황운하 위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KS 기준 정보인가 뭐가 있어 가지고 그 KS 기준에 정한 납품서에다가 폐기물 시멘트 성분 어찌고저찌고 이런 것을 다 기재하게 되면 지금 국토부가 난색을 표하는 것이 건설업자가 상세한 정보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납품서에 기재하도록 KS 기준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면 공개할 겁니까, 기준 개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황운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KS 기준 개정을 먼저 전 단계로 밟고 이어서 주택 건설업자가 제출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용권자가 공개하는, 그렇게 추진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이미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황운하 위원 폐기물관리법은 개정이 됐는데 우리 주택법은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KS 바꾸고 그다음에 주택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연계 의무가 규정되어야 되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비에다가 수수료 등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런데 일단 아파트에 대한 소관 부처가 이 관리법안은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함께, 저번에 법무부장관도 국무회의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태준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을 테니까 한꺼번에 얘기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그런데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 3년간 아파트 기준으로 보니까 제곱미터당 한 11% 정도 상승을 했어요. 공동주택 관리비 수준에 대해서 모 애플 사용자 8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약 74.9%, 75% 정도가 ‘비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봤는데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공동구매 시스템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전기나 청소, 경비구역, 소모품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파트 규모도 다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달라서 문제는 있던데 각 지자체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대략 한 66개 지자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대상이 되는 게 다 30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30세대를 넘어서 150세대 정도까지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현황을 좀 보려고 요즘에 있는 AI도 동원해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마 국토부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현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깜깜이인 경우를 조사해 봤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보니까 150세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K-apt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입찰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만약에 30세대를 넘고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이렇게 묶어 가지고 입찰에 응할 수 있게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 K-apt 시스템은 각 아파트 단지에서 개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30세대가 아니라 150세대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행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국토부에서는 시스템을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하는 기관 또는 어떤 단지에다가 이것을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예산이 없이도 이것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이것은 물론 조례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의 경우에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있으신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저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데 이 K-apt 시스템이 꽤 좋더라고요. 단지별 관리비 정보도 있고 회계감사 결과도 나오고 단지 정보, 유지관리 이력 등 쪽 나오는데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대국민 홍보 방안이나 시스템의 시인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안태준 위원 당연히 동의해 주시겠지요.

그리고 요즘 보면 모범관리 단지나 우수관리 단지 선정을 하잖아요. 국토부에서도 추천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준 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판 제작해 주고 정부증서 하나 주는데 이렇게 할 거면 인센티브도 주고 컨설팅도 제공을 해 줘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유인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안태준 위원 그렇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래서 우수단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동판 제작해 주는 게 무슨 의미 있냐 그래서 좀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이런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태준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배준영 위원 배준영 위원입니다.

장관님,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직 통합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통합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한다 안 한다라고 제가 말을 하기는 그렇고요. 공공기관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재경부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국토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배준영 위원 장관님, 이게 국감장이면 위증하신 겁니다.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정확하게 받았는데 공항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갖고 국토교통부가 재정경제부에 통합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니깐 ‘현재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이렇게 했고 한국공항공사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그랬는데 한국공항공사노조에서는 적극 찬성한다라고 성명을 내고 인천공항공사노조에서는 반대한다고 그러고, 재경부에 제가 3월 14일하고 24일 날 논의한 것 있냐고 질의를 했더니 아직까지 회신이 안 오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인천에서는 지역사회 131개 기관·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인천시의회도 통폐합 반대 촉구하는 성명까지 냈어요.

그러니까 통합 안 하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일단 통합한다 안 한다 그런 입장을……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 안 하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건 아직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통합 안 할 거라고 말씀하지 못하실 거라는 애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기관 통합 관련해서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 의견은 국토부장관이 논의가 진행되는 데 따라서 입장을 밝힐 수는 있지만……

○배준영 위원 아까 허위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러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천공항과 전국 공항은 왜 연결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얼마 전에 제주하고 인천 간에 비행기도 뜨게 됐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전에 국회의원선거 때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통합한다는 공약 관련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게 이렇게 다 맞아떨어져 가는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묻는 겁니다. 통합 안 할 겁니까? 말씀하지 못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권한 밖의 문제를 제가 단언하는 건……

○배준영 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현재 몇 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릅니다.

○배준영 위원 국토부 산하는 지금 29개인데 그중에 서울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이 도로공사가 김천이고 철도공사가 대전이고 국토정보공사가 전주에 있고 그렇지요? 왜 보낸 겁니까? 그냥 서울에 있으면 되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공기관 이전사업 하면서……

○배준영 위원 왜 보내는 거지요? 주무기관으로서 왜 보내시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준영 위원 균형발전을 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배준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인천공항공사하고 1개 정도 더 있는데, 전체 342개 기획재정부 공시 기준 공공기관 중에 인천에 몇 % 정도나 있을 것 같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굉장히,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배준영 위원 거의 없어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만약에 본사가, 아까 이연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청주로 한국공항공사를 보내 달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지역의 균형 있는 고른 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될 국토교통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오히려 역행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요.

○배준영 위원 왜 걱정을 안 합니까,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그러니까 현재 통합 문제와 이전 문제는 일단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과 이전이 사실 맞물려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인천이 그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실체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 배당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2007년에서부터 2025년까지 3조 3000억 원이 왔는데 그중에 가덕도에 몇조 원이 가고 경북, 새만금에 몇천억씩 갔습니다.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이 이미 특별회계를 통해서 전국 공항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왜 통합한다는 겁니까, 굳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배준영 위원 그러면 통합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위원님……

○배준영 위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배준영 위원 1분만 제가 더 하겠어요. 5분 혹은 3분이라면서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기다렸다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준영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내가 시간은 드릴 텐데……

○배준영 위원 합쳐도 된다면서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시간은 드릴 텐데……

○배준영 위원 예, 그러면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게 아니라 하시면 뒤의 분이 안 되니까 나중에 3분으로 하시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배준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3분 안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1분 하고 정리하세요.

○배준영 위원 장관님, 그러면 안 한다고 선언을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진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을 선언하는 것은……

○배준영 위원 그러면 국토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라든가 논의 과정을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배준영 위원 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가 어떤 단계의 논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국토부장관이……

○배준영 위원 아니, 문서가 주고 간 것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국토부장관이 어떤 논의를 해서 입장을 밝힐 때에는 구체적인 준비에 기초해서 판단을 내린 후에 입장을 밝히는 게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한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통합에 대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대통령의 생각도 그렇고, 재정경제부와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반박할 만한 논리를 말씀 안 하시고 근거를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정사실화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께서 유추해서, 확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원님.

○배준영 위원 아니, 걱정하지 말라고 능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통합 관련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인천공항공사 또 가덕도·공항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코레일 산하기관인 5개의 산하기관이라든가 코레일과 SRT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 정부 출범 이후로 바로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단순히 통합이라는 게 어떻게 그냥 합치는 식의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통합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유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철도 분야하고는 다르게 공항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진척되거나 준비된 게 전혀 없다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다음, 오전 순서 한 대로 김종양 위원님 먼저……

○김종양 위원 염태영 위원님 먼저……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염태영 위원 제 순서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염태영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염태영 위원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국공항공사 박재희 사장직무대행님, 오셨나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 예.

○염태영 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장관님, 지금 바로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드리기가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하셨고 그때 당시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또는 서울역을 거쳐서 지방으로 가야 하는 구조 이것은 개편돼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대통령의 이런 말씀, 지시 이후에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 있나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구체적으로…… 아직 준비 중에 있다고 봐야지요.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를테면 대통령께서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부산이나 광주로 직접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소해 보자 하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토부 차원에서는 이를테면 TF 구성이라든지 이에 대한 검토 회의를 한다든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어떤 TF를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천공항에서 KTX 문제 또 공항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박재희 대행님, 지금 이 문제는 똑같이 이해하고 있을 거고 이에 대해서 국토부로부터 검토 요청이나 지시를 받은 게 있나요?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박재희** 담당 부서하고 수시로 공유하면서 하나씩 과제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염태영 위원** 대통령께서는 한 달 한 10일 전쯤에 이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PPT를 열어 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없음’ 딱 네 글자만 왔어요. 대통령께서 공개 회의에서 문제 제기한 사안인데 주무부처 국토부에서는 아무런 검토도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조차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거든요. 이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잘못 보낸 것 같고요. 제가 일례로 들다 보면 인천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재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사실.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씀 이후에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고 또 다른 것도 검토하고 있다거나 이런 답변이어야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염태영 위원** 국토부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게 맞는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좀 잘못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염태영 위원** 지금 우리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의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는 거예요. 장관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지금 구조를 보면 인천공항에서 지방을 가려면 일단 서울로 나와서 김포공항이나 서울역 또는 용산역을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시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 샤를드골공항은 테제베(TGV),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이체(ICE), 영국 히드로공항도 엘리자베스 라인(Elizabeth Line) 이런 것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철도로 국내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게 훨씬 더 유용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선진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리 KTX 직결 노선이 2018년까지는 있기는 했었어요. 그렇지요, 공항발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없어졌는데 다행히 최근 들어서 인천발 KTX 잇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지 않고 송도에서 가요. 그러니까 송도까지 다른 편으로 연결하면 그것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염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항은 활주로만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내륙의 도시들과 연결되느냐 하는 것인데 가장 유용한 수단 중의 하나는 이를테면 KTX 같은 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전에 이연희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청주국제공항은 KTX 오송역에서 20km나 떨어져 있고 또 김해국제공항도 경전철 하나로 버티고 있고 이런 것은 반드시 저는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활로를,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거고 그랬는데 이것은 활주로를 늘리거나 공항끼리 연결하는 것 외에 가장 유용한 수단은 철도로 연결하는 거다 하는 생각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만 5극 3특 광역경제권 전략도 맞고 다핵 균형국가로 나가는 데 맞지 않겠나 하는데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떤 TF라든가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번에 5차 철도망 구축과 관련해 연동해서 그 문제를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서류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염태영 위원 예.

저도 아까, 그런 생각은 안 했는데 배 위원님이 굳이 1분을 쓰셔서 저도 1분을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다음에 추가로 질문 안 하시면 됩니다.

○염태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앞에서 대우건설산업 노조가 2월 24일부터 오늘까지 37일째 농성하는 것 알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염태영 위원 이 회사는 작년 2월 채권단 78% 동의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고 올 3월에는 건설공제조합을 포함한 모든 채권단에 현금 변제를 완료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조합원으로 있는 건설공제조합은 과거 소각된 채권 181억을 추가로 갚지 않으면 신규 보증 못 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설 기업회생에 관련해서 보면, 채무자회생법에 보면 회생계획에 의하지 않은 개별 변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의 내규는, 조합 내규는 조합원의 이익, 채권 관리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했나 봤더니 이전에는 68개 업체에 대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대로만 했고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가 변제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고 내규가 법 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해서 저는 대우건설산업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고 37일째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 일을 보면서 결국은 보증이라는 금융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면서도 금융 당국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문제, 건설공제조합이 법을 무시하고 내규로 이렇게 강제하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제가 확인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지금 37일째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이 내용도 사실은 국토부에서 이렇게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국토부는 그것까지 챙겨 보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어 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한번 그 현장에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오늘 장관님께서 쿠광도 체험해 보시고 또 이런 현장도 방문하시겠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장관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염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제가 인천공항 개항을 할 때 항공정책과 총괄서기관을 하면서 인천공항하고 지방공항 연결하는 것 정책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니까 벌써 한 20년도 더 됐지요. 그 당시에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편을 띄우면 손실이 평균 20억 났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공항에서 지방까지의 노선을 개설하려면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고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서 결정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쉽지 않은 게 어차피 손님은 거의 안 탈 거고 노선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제니까 실무자들도 노선 검토를 할 때 비용 문제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다음에 김종양 위원님.

○김종양 위원 장관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성공한 국회의원인데 하여튼 장관으로서도 성공하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국토부장관으로서 성공 여부의 가늠자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정책이 성공하느냐 아니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제가 SNS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뭐뭐다’ 이렇게 한번 올려 봤더니, 물론 장관님께서 참 잘하고 있다 이런 답을 기대하겠지만 드러난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다 등등 기대와 다른 내용이 나왔어요.

저는 저기예다가 넣고 싶은 게 K-부동산, K-양극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 보고에서도 국토균형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방 미분양 완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성과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시장 양극화, 주택시장 양극화는 결국은 지방경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결국 지방 미분양을 악화시키고 또 지역 건설업 고사, 일자리 감소, 지역 내 총생산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 양극화는 지방경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 부동산이 죽어 가는 상황에서 국토균형성장이라는 구호는 빛 좋은 개살구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면요, 이재명 정부가 가져온 부동산 양극화를 수치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한번 봐 주시지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아파트가격 5분위 배율 통계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4.6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예를 들자면 경북 김천의 아파트 100채 이상 구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남동 나인원한남 한 채 가지고 경북 칠곡군에 있는 아파트 1170채 살 수 있다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아파트 매매 지수 한번 보세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은 급등하고 있고 5대 광역시 및 지방은 계속 하락세로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 한번 보세요. 서울은 약 18.7% 급증했지요. 그런데 비수도권 7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1순위 주택 청약시장에서 비서울 지역은 평균 4.1 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는 160 대 1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제가 전국 언론사 29개의 사설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저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 등 핵심 선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신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주였습니다.

장관님, 물론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양극화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독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양극화가 계속 정부의 어떤 그런 기대, 발표와 달리 심화되고 있는 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주요한 배경에는 일단 어쨌든 아파트도 수요·공급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투기성 주택 보유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처가 저는 약간 잘못돼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대처……

○김종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의 6·27 대책부터 올해 1·29 대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은 전문가라든지 시장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요구와는 정반대로 나가는 오히려 비뚤어진 청개구리 정책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는 등등. 시장에 오히려 정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이념 중심의 경제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규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어떤, 이미 검증된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런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께서도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알겠습니다.

○김종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분들은 오전에 질의를 못 하신 분들 순서대로 해서 보충질의를 할 텐데 문진석 위원님, 권영진 위원님, 천준호·정준호·정점식·김은혜·김정재 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님.

○문진석 위원 천안갑 문진석 위원입니다.

어제 국토교통소위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당 위원님들께서 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을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도 국가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 요건이 있고요. 또 사업 단계별로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민간이 판단해서 사업에 참여하고 또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지요. 국민의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언론을 보니까 최근에 사업후보지 추가 신청을 몇 개를 받기로 했다는데 관심 있는 지역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추가로 신청하려고 하는 지역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추가 그것보다는 현재 관리 중인 곳이 한 44곳 이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문진석 위원 저희 의원실에 전화가 왔어요. 은평구 주민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사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완화해 주고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자고 자꾸 주장을 하고 또 법도 바꾸자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도심 공공복합개발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현재 규제 완화라든가 또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또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야당 위원님들은 사실은 복합개발이 성과가 없다면서 반대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과가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49곳 중에서 29곳이 지구 지정이 돼 있었고요.

○김은혜 위원 소위를 들어오세요.

○김정재 위원 우리 소위를 저렇게 왜곡하다니요.

○문진석 위원 조용히, 질의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9곳은 사업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진석 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특히 제물포역 지구는 후보지 발표 5년 만에 착공 예정인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재개발·재건축이 평균 1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5년이면 굉장히 빠른 거 같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이게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재건축·재개발 이런 조합인데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전부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좀 없잖아요,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맞습니다. 공공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진석 위원 또 마지막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데 이것도 사실은 2024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있어요, 독소조항을 대부분 제거하고. 이 사업에서 특별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24년 12월에 통과시킨 법안 내용에 기초해 보면 현물보상 기준이라든가 또 현물보상 범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재산권 제약 문제는 상당히 해결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문진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양 위원께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K-양극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 60%가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열린 국토소위인데 사실 주택 보급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입법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빨리 국토소위에서 좀 속도를 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야당에서 이렇게 훼방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국회에서 이번 회기에 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꼭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진석 위원 저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1분 하고 마무리하세요.

○문진석 위원 조경숙 LH공사 사장직무대행님 계십니까?

사장님이 안 계셔서 큰 조직을 끌고 가시는 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보면 LH에서 분양 공고 예정을 해 놓잖아요. 이게 지체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우선 사전청약 단지가 본청약까지 좀 지연된 데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보상이나 문화재 조사 과정에서 좀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문진석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기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인력은 부족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저희가……

○문진석 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좀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직무대행 조경숙 예, 충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장관님, 기재부가 167명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500명으로 늘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진석 위원 장관님도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들은, 일을 하자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문진석 위원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면 과감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력충원계획을 받아 보고 그걸 점검하고 타당하다 판단이 되면 대통령께 보고하셔서 가지고 인력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십시오.

○김은혜 위원 가급적 소위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까지 저희가 합의 처리될 때까지는 논의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자 서로 간의 존중하는 태도라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깨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지금 장관님은 밑에 해당 부처 직원분들이 제대로 보좌하세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LH가 반대를 하는 한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진석 위원 의사진행발언인가요, 그게?

○위원장 맹성규 절 쳐다보고 하세요.

○천준호 위원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의사진행발언만.

○김은혜 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방해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팩트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야당 위원들이 왜곡을 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없었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감입니다. 오죽하면 82곳 후보지 중에서 단 한 곳도 지금 착공이 안 됐겠습니까? LH가 잘못돼서 했다는 것을 어제 이 자리에서 차관님 답변하셨잖아요.

따라서 소위에서 그 당시에 논의에 참석하지 않은 위원님이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야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도 다음에 심사하기로 논의됐던 건 여당 위원님 어느 분도 반대하지 않았습시다. 그래서 이같이 뒤늦게 그리고 사안에 대해서 왜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질서 유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성규 결론만 저한테로 온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도 할게요, 의사진행발언.

○김정재 위원 저도 합니다. 진짜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야.

○위원장 맹성규 아니, 같은 취지라면 충분히……

○김정재 위원 소위에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한 건데……

○위원장 맹성규 같은 취지라면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시고……

○문진석 위원 아니, 내 느낌을 얘기한 건데, 위원이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종욱 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거기 위원도 아니시면서.

○김정재 위원 느낌이라니. 왜곡을 한 거지요.

○김은혜 위원 법안을 심사하시고 토론하시고 논의하세요.

○권영진 위원 같이 했던 당사자들을 앉혀 놓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도발이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지.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 법안소위 4명 앉혀 놓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문진석 위원 아니, 개정안도 아니고 현행법에 되어 있는 걸 그걸 개정한다고 막 주장하니까……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법안을 공부하시고 얘기하세요, 느낌을 얘기하지 마시고.

○안태준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재 위원 진짜 공부 좀 하세요. 정말 너무 심하네.

○이종욱 위원 아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재 위원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 뭘 좀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김은혜 위원 이거 또 소위 안 하시고 전체회의로 끌어올려 가지고 또 무작정 힘으로 밀어붙이실 건가 봐요. 전조입니까?

○김정재 위원 아니, 이거 정말 너무한 거예요. 논의를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신 거고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김은혜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맹성규 문제 제기를 하셨고……

○김정재 위원 아니, 저도 의사진행발언할게요. 나 정말 10년 정치하다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진짜.

○위원장 맹성규 위원님,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취지가 같은 거잖아요.

○김정재 위원 여태까지 이런 경우 정말 처음이에요.

○위원장 맹성규 취지가 같은 거니까 충분히 위원님들 의사가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김정재 위원 너무 심하네, 정말. 너무 심해.

○김은혜 위원 위원장님, 약속해 주십시오. 다시 소위에서 또 뭉개고 나서 전체회의에서 강행 통과시키려는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약속 해 주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소위에서 또 한번 논의해 보시면 되지. 논의하세요.

○김은혜 위원 소위에서 합의하지 않으면 전체회의에 상정 못 하는 겁니다.

○김정재 위원 아니, 내용을 왜곡하잖아요, 내용을.

○위원장 맹성규 논의하세요.

○김정재 위원 어제 참석했던 차관은 뭐 하는 거예요? 장관님 잘 보좌하지. 어제 분위기를 잘 전달해야지 일을 엉터리로 하면 어떻게 해.

○김은혜 위원 내용을 갖고 싸우십시오,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다음, 권영진 위원님 진행해 주시지요.

7분 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위원장 맹성규 말씀하세요.

○권영진 위원 오전에 제가 구글에 1 대 5000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서……

○위원장 맹성규 그거 안 왔어요?

○권영진 위원 예,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다. 왜 안 왔는지……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된 거지요, 구글 관련 자료?

1차관, 답변 주세요.

누가 아는 사람 답변하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자료가 준비됐는데 아직 제출을 못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됐는데 제출 못 하면 어떻게 해.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예.

○위원장 맹성규 어떻게 된 거야. 받을 수 있어요?

○권영진 위원 자료 없이 질의를 해야 되겠네.

○위원장 맹성규 아니, 그러면 오늘 받으시고 내일 질의하시든지요.

○권영진 위원 내일이요?

○위원장 맹성규 아니면 순서를 바꾸실……

○권영진 위원 그러면 자료 없이 몇 개만 여쭙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 순서를 바꾸셔도 됩니다.

○권영진 위원 몇 개만 여쭙볼게요. 우선……

○위원장 맹성규 질의 끝나시면 자료 드리세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이탁 알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자료 보고 나중에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고 우선은……

○위원장 맹성규 질의 시작하시지요.

○권영진 위원 우선 장관님, 2월 28일 날 중동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 건설업계 그리고 항공업계, 여행업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파악 중에 있습니까, 아직?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 하시는 걸,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접근을 해도 되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건설업계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어려움이 뭘니까,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건설자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권영진 위원 그러니까 페인트 등의 건설자재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레미콘 혼화제로도 나프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이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70% 올랐더라고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건설업계가 이걸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건설현장이 중단되거나 이런 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지금 지원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계세요,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현재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지금 현재 애로센터를 만들어서 정보를 취합하고 있고 현재 산자부와 협의해서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내일 보고할 때는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두 번째, 유류할증료 지금 몇 % 올랐는지 아세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3배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지금 현재 33단계 중에서 18단계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위원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항공·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현황도 장관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또 지원 대책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이 여파가 언제까지 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지금 원유시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파괴돼서 생산능력을 원상회복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다음에 호르무즈해협

이 정상화되는 데도 전투가 끝나도 굉장히 꽤 오래 걸릴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꽤 오래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내일 보고 때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다음에 구글 지도 반출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우선 장관님의 입장이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에 세 차례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국외 반출 결정을 유보했잖아요.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권영진 위원 그리고 7월 29일 날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도 그것을 공개한 나라가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국외 반출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고 10월 13일 날 국정감사에서도 국토부 입장은 국외 반출 않는 걸로 정리됐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불과 넉 달 만에 2월 27일 날 관계기관 협의체 열어서 조금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이것 국외 반출을 허용하셨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이렇게 장관님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뭡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지도 국외 반출 문제의 핵심은 안보 문제가 저는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안보 문제를 고려했을 때…… 바로 구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서버를 바로 송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핵심적인 쟁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반출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되었고요.

또 안보 문제와 관련되어서 안보실과 협의를 했을 때 사진을 가린다든가 위성항공 사진에서 군사시설·보안시설은 보안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좌표 표시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을 줌으로써 실제 안보 문제에 커다란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권영진 위원 장관님, 그런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요, 1 대 5000 지도는 굉장히 정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요즘 AI 기술을 입혀 버리면, 이걸 재가공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민감정보에 대한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던 단순 보안 조건으로는 2차 파생 데이터 통계를 통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고정밀지도가 만일 국외에 반출되어서 데이터 원형 복원이나 2차 파생 데이터, 데이터 유출 등의 문제 발생 시에 국토부가 이것까지도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있습니까? 이것은 없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건 단순 보안 대책이에요. 단순 보안 대책은 구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조건부로 한 건 맞는데 이걸 AI 기술을 가지고 2차 파생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유출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차단 대책이 있느냐를 여쭙는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 지도 반출이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킬 우려가 대단히 크다는 우려들이 경제계나 이런 데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간 예상피해액이 150조에서 197조 원 정도라고 추정하는 데도 있어요, 전문기관이나 업계에서는. 그래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로 인해서 구글 웨이모가 국내 산업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호할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국외 반출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더 적극적이었고요. 저희 국토부하고 안보실과 협력해서 실제 안보 문제를 핵심적 의제로 해서 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판단이 서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 다만 일정하게 계약이 불이행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상시적으로 이 허가를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영상 보안 처리라든가 좌표 표시 제한이라든가 국내 서버 활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이 해결이 된다면 국외 반출을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게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니까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게 실제적 진실인지 장관님의 추론인지 이걸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지금 갖다 드리세요. 준비되는 대로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부족하시면 나중에 추가로 더 하세요.

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준호 위원** 서울 강북구갑 출신의 천준호 위원입니다.

김윤덕 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국가 상징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광장에 정체불명의 받들어 총 조형물을 기어이 설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도 없었고 당연히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추진하면서 관련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아서 위법한 행태,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데요. 서울시가 설치하겠다는 지상조형물과 문화시설이 들어설 세종로공원 앞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와 광장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서울시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그와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이렇게 여쭙았는데 당시 장관님께서 공문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서울시한테서 관련된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준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18조 1항은 국가 외의 자가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영구시설물 축조를 못 하게 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가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주민생활

을 위한 문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즉 국토부와 협의의 거쳐서 총괄청, 즉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재정부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협의 절차가 일체 없었고 서울시는 협의와 승인 절차를 일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아무리 제가 이해하려고, 국토부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 국유재산 관리권을 위임·위탁했다고 하더라도 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 지하를 뚫어서 지하공간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냥 대강 넘겨도 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조형물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에 해당하고요. 지하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미이행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을 국토부에서 내렸고 서울시가 줄속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유 절차들을 일정하게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토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서울시가 임의로 영구축조물들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국토부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구축조물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그 절차를 일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천준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문제가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 그 문제가 그냥 ‘있습니다’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국유재산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가 그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그 승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영구축조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 걸 언제 아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언제 알았는가는 저도 정확한 시간은……

○**천준호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제대로 장관님한테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토부가 그걸 인지했다고 하면 위법한 행위를 한 서울시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않고 국유재산을 임의로, 영구축조물들을 건축했다고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상황은 파악이 돼 있고요. 현재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처

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준호 위원** 그래서 만약 위법한 것이 확인되면 정확하게 이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셔야 됩니다. 왜? 국가 재산을 임의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기다가 아무런 절차 없이 영구축조물을 설치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정준호 위원** 장관님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통합 관련된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저는 코레일네트웍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업무를 보니까 역무, 매표, 고객센터, 안전질서유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매출을 보니까 코레일에서 위탁하는 비용이 매출의 한 75%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경영이나 인사권은 코레일이 행사를 한다라는 말도 많고, 제가 보기에선 전형적인 간접고용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동일해도 임금은 또 절반 정도 차이가 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아니냐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질서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안전 책임은 현장에 있지만 권한과 보상은 부족해서 철도 안전과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니까 코레일은 다 정규직 직원들이신데 코레일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무기직 비율이 한 93% 정도가 됩니다. 금번 정부는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는 직접고용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이미 내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고용 관련된 내용과 로드맵이라든지 의지 부분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긴 방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번 통폐합 문제가 여러 가지 기능의 어떤 복잡한 것들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치기 때문에 실제 그런 문제를 처우 개선을 위해서 가능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큰 틀에서 동의하시고 방법은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겠다 정도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다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통합의 목적은 어떤 기능 조정이라든가 효율성에 역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더 악화되거나 더 문제가 되는 방향으로 절대 가지 않겠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겠고, 다만 위원

님이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관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국조특위 구성돼 있다는 말씀은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준호 위원 관련된 내용 중에 부동산 통계 조작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을 보니까 오는 9일 날 보고하고 21일 날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28일 날 종합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뉴스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굉장히 터프하게 진행이 돼서 관련된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고초를 많이 겪었다는 얘기는 들어 보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 위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압적으로 감사가 진행되었느냐 이런 걸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봤더니 어떤 피감사인은 스물다섯 번 이상 소환된 사람이 있었고 해외 교육 파견 중에 ‘파견 중단하겠다. 자비로 귀국을 해라’라고 종용받은 사람도 있었고 육아휴직 중이었던 여직원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조사가 됐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국조특위에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 친위부대인 감사원 특조국의 강압 감사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처럼 고초를 겪은 국토부와 부동산원 피감사자들이 한번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힘들었던 내용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련해서 장관님도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는 특히 정책 사업에 대해서, 정책 문제에 대한 감사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는 제가 일단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압박이 있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 주어진 조건에서 볼 때 제가 판단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있고, 현재 국토부 공무원들의 사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통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개별 공무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토부 전체의 어떤 구조적이고 또 뭔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현재 검찰에서는 ‘통계 조작’ 이런 용어를 써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는 ‘통계 수정’으로 바꾸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부동산 통계 문제에 대한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어서 우리 국토부 공무원들이 정말 믿고 안심하면서 국정에 성실히 일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점식 위원님.

○정점식 위원 장관님, 이종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월세시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서의 임대차 수급 현황에 대해서는 장관님 보고를 한번 받으셨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초래된 것이 결국은 소위 임대시장에 매물이 안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매물이 안 나오게 된 이유는 결국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비난·비판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잠겼고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 때문에 임대차시장의 매물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로 인해 가지고 소위 주택 매매가는 안정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시장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전체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과정 속에 놓여 있다, 다만 지금 현재 일부 강남 지역의 경우에는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모양이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과거 굉장히 큰 상승세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일부 굉장히 떨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상승세가 꺾이고 꺾일 전망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그 여파로 인해 가지고 지난 몇 달 사이에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정점식 위원 어느 정도 감소를 했던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정점식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이 수치는 거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저도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불과 몇 달 만에 전세 매물은 2만 5000개에서 1만 6000개로, 월세 매물은 2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줄었습니다. 30% 이상 매물이 사라진 겁니다. 결국 수백수천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매물이 겨우 한두 개 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장관님 보셨을 겁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을 건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되고 있다는 것은 보고받으셨지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24년에는 5억 3400만 원, 25년의 경우에는 5억 6200만 원, 올해 2월에는 5억 9000, 거의 6억까지 올라갔습니다. 22년에 고점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6억으로 상승을, 급격하게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점식 위원 실수요자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서민들과 우리 청년세대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맞습니다.

○정점식 위원 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는데 서민들과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파트를 사려고 그러면 돈 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만 사라, 대출로는 못 산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할 거기 때문에 다 팔아라. 그리고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서 실거주 안 하면 허가 안 해 준다고 하니까 결국은 서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살 임차주택이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월세는 더 심각합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가 사상 처음으로 150만 원 그러니까 2월 기준으로 151만 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13%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2017년, 2018년 상승률 19% 이후에 최대치로 상승했다는 건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서울 지역의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수치는……

○정점식 위원 476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따져 보면 결국은 소득의 32%, 3분의 1을 주거비용으로 지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그런 소위 청년세대들, 서민들은 자녀 교육이라든지 생활비를 어디서 감당을 하겠습니까? 3분의 1을 주거비용으로, 딱 그 집에 주거하는 비용으로만 쓴다면 생활비용 자체를 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소위 공급 위주가 아닌 규제 위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재명 정부는 규제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전월세 매물이 마르고 또 전월세가 일정하게 올라가는 문제의 그 요인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그걸 유예한 그런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실제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가 상당히 현저히 줄어드는 그런 조건에서 발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양도세 일몰 취소한 게 총수요 면에서는 일정한 변화가 없지만 지역별 내지는 주택 가격에서의 일정한 미스매치도 존재한다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점식 위원 임대사업자라든지 개인 임대를 최악시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김은혜 위원 장관님,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대로 끌어다 쓰신 건 환영합니다. 좋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가져가면 안 되지요. 지난 정부와 달리 이 정부에서 5년 만에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어찌다 한 번 오른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지난 18년간의 공시가격 추이를 제가 전해 드리려

고 합니다.

올려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관계없이 공시가격이 민주당 정권 때만 유독 뛰어오르고 있어요. 17년부터 21년까지 파란색 그래프 그리고 25년부터 시작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독 민주당 정부에서만 공시가격이 오르는데 화곡동 아파트가 진짜 우연이겠습니까?

공시가격 제도개선이 이 정부 기조라 하셨으니 어떻게 바꾸실지 알려 주십시오, 장관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리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위원님 질문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윤석열 정부……

○김은혜 위원 아니요, 제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석열 정부하고……

○김은혜 위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윤석열 정부하고 전혀 정책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김은혜 위원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 때는 안 올라갔던 공시가격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올라갈까요, 그것도 5년 만에 최고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위원님……

○김은혜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하십시오. 제 시간을 깎지 마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깎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질문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은혜 위원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쟁할 생각이 없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야말로 정쟁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시가격 올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김은혜 위원 현실화율을 올리실 겁니까, 안 올리실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김은혜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쭙볼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김은혜 위원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유지하실 겁니까? 장관님이 답변을 안 하시면 시장에서는 올리시는 걸로 판단하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공급을 터야지 수요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김은혜 위원 나중에 답변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얘기 한번 하시지요,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가 뭐가 다른지.

○김은혜 위원 아니요, 국민이 보시는데 왜 따로 얘기합니까, 여기서 얘기하셔야지.

공급을 터야지 수요만 틀어막고 세금으로 두들겨서 부동산 대책 먹히겠어요? 지난 정부 좋은 것 가져다 쓰신다면 현실화율만 가져다 쓰지 말고 민간 공급 확대 그리고 세부담 최소한도 벤치마킹하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월 22일에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는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다 하시고……

○김은혜 위원 이것 시행하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오히려 우리 주토실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한번 직접 물어보시지요, 뭐가 달라졌는지.

○김은혜 위원 답변하십시오. 대통령이 규정한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에서 고가란 얼마입니까? 대통령 지시 사항 지금 이행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현재 고가 주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아직 이행 안 하고 계시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배제하라고 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서 과다란 무엇을 얼마나 보유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부동산 과다 보유자라 하는 것은 2주택자가 있고 3주택자가 있고 그 이상이 있고……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배제하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지금 저건……

○김은혜 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 정책 논의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김은혜 위원 다주택자를 배제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것을 이행 안 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행 않는 게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이라는 그 부서는 어디 어디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주택토지실하고 주택공급추진본부 정도가 범주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면 장관비서실은 예외예요? 교통 부서는 주거와 따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은혜 위원 그러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담당하는 국토도시실은 어떤 기준으로 빠진 겁니까? 기준도 없고 자료 확인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토지실은 없어요. 국토토지실은 없습니다, 위원님.

○김은혜 위원 국토도시실은 앞으로 조직 과정에서 없애신다고 얘기했지 현재까지 있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요, 주택토지실이 있고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있어요.

○김은혜 위원 국토도시실이요, 국토도시실.

제 질문의 시간을 뺏지 마세요.

장관님, 국무위원으로서 이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이 지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이의 제기하거나 재고를 요청하신 적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없습니다.

○김은혜 위원 없지요. 장관님, 이 지시는 그런데요 2020년에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했던 겁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실거주 외의 주택 모두 처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처분 못 한 공무원들은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승진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적합한 지시라고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은 잘 몰라 가지고요.

○김은혜 위원 그런데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소송까지 간 사안입니다.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대통령의 지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도 도덕성, 청렴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어요. 그래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불법이라는 거지요.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서 주택 보유 현황,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3월 지시 또한 직권남용·불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건데 국무위원으로서, 국토부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한 번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법령 근거인지 따져 묻지 않았다는 건 밑에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섭섭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건 뭐냐 하면 불법이나, 불법이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 정도는 공무원들하고 신뢰를 유지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장관님, 정치인을 떠나서 어떤 근거로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것을 조사하라고 하는지, 어떤 근거로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하는지는 법령과 법치주의에 따라서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 법에 맞게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률인지 알려 주세요.

그러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의 다주택자 조사 기준과 방법, 현행 조사 상황과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고요. 국토부 기조실, 정책보좌관, 장관비서실은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정책 논의와 무관한 부서인지 그 판단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국토부가 소속 공무원들의 다주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리고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지 검토된 근거 또한 의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검토를 좀 자세히 준비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김은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동산 공시가격, 저도 사실은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잠깐 김규철 실장,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맹성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도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실장하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일단 공시가격 산정 방식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도에 공시가격, 특히 서울과 한강벨트 위주로 굉장히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그 부분이 반영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제 그 부분이 그러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달리 반영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 시세의 변화가 있으면, 시세가 변하고 호가가 있을 거고 실거래가가 있을 거고 이런 실거래가, 시세, 호가, 이런 부분들을 평균값이라든가 중위값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부동산원에서 1차로 일단 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그 산정한 걸 가지고 또 2차로 지역 본부에서 개별적으로 더 검증을 하게 되고요. 또 검증한 결과를 가지고 민간 전문위원들—교수라든가 감평사라든가—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세 단계 이상으로 계속 검증을 해서 정부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번에 공시가 결과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공시가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도 계속 검증 단계를 거쳐서 혹시 오차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곡동, 그 부분은 어떤 사례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실거래가가 있으면 그 실거래가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평균값이라든가 중위값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아파트 단지에 실거래된 게 없었다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를 같이 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실거래가하고 공시가격의 변동률이 약간 좀 달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존 틀은 전 정권 틀과 같이 유지를 했는데 다만 시세가 올라서 그거를 부동산원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 위원님, 그렇게 답을 했어요. 저도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김은혜 위원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없었을 경우에 주변의 호가를 물어보는 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늘 부동산원에 게시는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실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에 이것을 주변 호가를 선택해서 작위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던 거고 정부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따라서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바꿔야지 국민의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위원의 질의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어차피 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관님, 대통령 모두가 다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면 의식이 되
지요? 공직자인데 의식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의적인 판단이나 위축이 되
는 부분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꾼다면 통계를 뭐라 부른다 한다 하더라도, 통계를 어떻게
부르든 호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팩트에 근거한 공시가격, 즉 국민들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조세수용성, 응능부담의 원칙을 관철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은 전 국민 자
산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거를 검허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장관님께서 국토도시실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관님 뒤에 국토도시
실장이 앉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토지실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까 토지실장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토지정책관이 있고요, 주택토지실 안에 토지실이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제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거예요, 국토도시실이라고 한 건데. 제 발음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문제는, 궁금한……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김은혜 위원 예.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윤석열 정부하고 저희 정부하고 공시
가격 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이게……

○김정재 위원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 것 설명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맹성규 잠깐만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의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고려
해도 되겠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요, 첫째는 실거
래 가격이 없을 때 그러니까 주변의 호가를 가지고, 아무래도 부동산원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명확한 기준을 좀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의
로 하지는 않겠지만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야말로 만일에 부동산원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
고 의식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김규철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
고 아까 김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실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호가 그리고 실거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차가 안 생기도록 하
면 제일 좋은데 사실 모든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가가 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
분들을 보완하는 장치들은 반드시 둘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것처럼 균형성을 확보한다든가 그리고 또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더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부동산원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까 부동산원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원장, 나와 계시지요.

전 정부에서 통계를 수정했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한국부동산원장 이현욱 예.

○위원장 맹성규 부동산 공시가격도, 예를 들어서 어떤 의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실 다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이현욱 제가 부동산원에 지난달, 올해 2월 25일에 왔습시다만 부동산 통계와 데이터에 대한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합니다. 자부하고, 직원들의 데이터 통계 조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전문적으로 또 어떤 편견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수차례에 걸쳐서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고, 여러 교수님들이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하는데 특히 올해는 아주 매우 정확하게 했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해 주시면 저는 또 겸허하게 그런 지적을 감안해서 더욱더 정확한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성규 눈치 안 보고 하실 거지요?

○한국부동산원장 이현욱 눈치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나중에라도 부족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김정재 위원님.

○김정재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우 정확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건 정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장관님도 그렇게 밝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정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답이에요. 시세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맞지요? 공시지가는 시세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저희 집도 제가 충분히 수궁할 만큼 공시지가가 올랐더라고요. 제가 은평구 사는데 집값이 안 뛰었어요, 다른 데 비해서 별로 안 올랐어요. 층마다 다르고 같은 아파트도 다릅니다.

그런데 시세의 변화라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공시지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부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 그렇습니까?

○김정재 위원 그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이제 이해했어요.

○김정재 위원 이제 이해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공시지가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게 아니고……

○김정재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렇지요? 시세가 많이 반영되다 보니……

○김정재 위원 예를 들어서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이 뛵니다. 집값이 뛵면 당연히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이제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 위원 이거는 정권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신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정권에 따라 달라진다는,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이해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도둑이 제 발 저릴 필요가 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걸 분명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재 위원 이거는 시세 변화에 따라서 공시지가는 변하는 거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괜히 그렇게 갑자기 발끈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번의 1·29 대책은 핵심적인 거는 도심 내의 우수 입지의 유희부지 또 노후 청사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공급이 잘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정말 목적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냐, 그 말을 여쭙본 거고요. 저는 어디가 얼마나 몇 호를 언제,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적어도 장관님께서 2027년에는 일부 사업이라도 착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것이 착공되는 게 있는지 그걸 여쭙본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착공 정도는 아셔야지, 하나 정도는.

그다음에 적어도 임기 내에 입주가, ‘위원장님, 사실은 착공한 다음에 입주까지 사오 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은 되지만 입주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입주가 과연 가능한지, 어떤 곳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본 거예요. 왜? 공급을 한다고 하니.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 착공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문제 또 이전의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이고 팩트 관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위원님들은 날짜, 무슨 숫자를 기억하냐, 챗GPT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

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다음에 보유세, 앞으로 인상하실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보유세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상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런데 인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장관님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전세를 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유세를 인상하면 양도세는 낮추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양도세는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개인적으로 여쭙보는 겁니다. 장관님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일단 제가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고요.

○김정재 위원 전문가일 필요 없어요. 저희도 전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다만 제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세금 문제에 대한 예민한 조건에서 제 개인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위원님.

○김정재 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보유세는 좀 올려야 된다, 그래야 불필요한 보유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집을 좀 내놓을 거다, 그러면 공급이 좀 많아질 거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장관님의 생각을 얘기하셨을 겁니다. 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유세 강화하는 것에 대한 장점은 투기 수요도 억제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자산 과세에 대한 형평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안을 하자면 양도세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목적인 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지금 현재 양도세를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만 인상을 하게 되면 절대로 집을 안 내놓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는 매년 내야 하는 비용이예요. 그러나 양도세는 지금 팔게 되면, 집을 만약 보유세 때문에 판다 이러면 양도세 부담이 엄청나게 큼니다. 그런데 대충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세금을 내 가면서 한번 버텨보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래량은 급감할 것이고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감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보유세만 올리게 되고 양도세를 유지하면 절대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예측하는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경직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또 전월세값만 오른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많이 내면 결국은 전월세로 전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으로 하는 전세, 월세를 가진 서민들을 어떻게 편하게 살게 할 것인가가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인데 그게 달성될 수 없다는 거지요.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더 디테일하게, 인상을 했을 경우 다른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서 정말 집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집들을 내놔서 시장 유동성을 가져올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들겨 패겠다라는, 누구 하나를 잡아먹겠다라는, 다주택자를 돈에 홀린 마귀라는 등 이런 식으로 정치적 표현을 하면서 주택문제를 정치화시킬 때는 절대로 주택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김정재 위원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다들 전문가일 거예요. 우리 위원들 전문가 아닙니다.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주택정책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권이 했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2018년에 부동산 보유세 올렸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자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2007년에 집값 못 잡아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습니다. 마지막은 패자들의 엔딩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이재명 정부가 어떤 엔딩을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정치, 정권 생각하지 말고요 서민들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세제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서 대통령한테 드릴 말씀은 드리고, 아마 지방선거 때문에 대통령께서 최대한 정치적으로 주택정책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다들 냉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장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아직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취임해서 첫 기자회견장에서 개인적 소견을 전제로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답을 한 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제가 가진 개인적 철학 차원에서 한 거고요.

지금의 보유세 문제……

○김정재 위원 양도세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도세도 개인적 차원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지금 보유세 문제나 세금 문제는 워낙 현실 속에 놓여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후에 정부 입장이 나오는 게 순리겠다.

또 하나는 저는 금융정책이나 통화정책이나 조세정책이나 규제정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동산 부조리에 대한 감독정책 이런 다양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서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특히 국토부는 공급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처이기 때문에 공급 문제와 결들여서 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금 문제를 둘러싼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설계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이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장관님,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사회악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대출 금지,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도 다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국토부장관이 볼 때 장기 임대주택, 민간임대사업자 다 없애 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현재 민간임대사업자, 특히 매입임대사업자는 이미 끝나는 걸로 정리돼 있고요.

○**이종욱 위원** 아파트는 3년 내에 등록 말소하도록 돼 있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말소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나머지 다른 것은요?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은 유지할 겁니까? 그것도 다 다주택자인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지요. 그러니까 매입임대는 아파트 분야를 한정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아파트 분야에 대해서는……

○**이종욱 위원** 아파트 아닌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은 다주택이어도 괜찮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비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구축 매입임대의 아파트에 한해서 의견을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요? 그렇게 안 들었는데 하여튼 그렇다 이거지요, 정부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종욱 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건설임대면 다주택자라도 상관없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건설임대 문제는 현재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서 신축 건설임대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당연히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주거 안정 측면에서 민간임대사업자 중요하지요. 하여튼 그 입장이 조금 헛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임대를 줄이자는 것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는 없애자는 것도 3년 내 없어질 것을 더 빨리 없애자는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면 민간임대 줄인 만큼 공공이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메우고 있는지 제가 LH한테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지요. 지금 서울 아파트, 정권 바뀌고 나서 지난 8개월간 실제로 실입주 물량 제공한 게 164호입니다. 연간으로 따져도 올해 말까지 435거든요. 그러니까 제 문제 제기는 겨우 몇백 가구 공급해 놓고 서울 민간장기임대 아파트 4만 2500호를 없애 버리겠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런데 위원님, 집을 짓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요,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공급하는 건 저희 정부 때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전에 준비해 왔던 게 지어져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임대 영역은 법적으로 이미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 발언 하고 나서 조금 뒤에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드리면 부동산세율을 올려야 꼭 부동산세 카드를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이 정부 들어서도 부동산세 카드는 쓰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 아까 말한 공시지가 오르면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재산세·종부세 합쳐서 1조 원 정도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10·15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하는 순간 다주택자 취득세가 2배 반 올랐고 증여세가 3.2배 올랐어요, 벌써. 꼭 세율 안 올려도 벌써 혜택이 사실상 세율 올린 것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이 정부 들어서 전혀 부동산세 카드는 안 쓰고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이라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5%다, OECD의 반밖에 안 된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고 이 0.15%라는 숫자를 대통령도 말했고 정책실장도 말했고 국토부장관님도 직접 말하셨어요. 그렇지요?

0.15가 어디서 나왔느냐 출처를 확인해 봤습니다. 어디냐? 민간 연구소 토지자유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 기치가 뭐냐?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 토지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이런 것 하고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48조를 조성하면 1인당 62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0.15라는 숫자를 대통령부터 국토부장관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얼마 전에 나왔지요?

우리 예산정책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숫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효세율이라는 숫자는. 공식적인 국제 비교를 할 수 없고 OECD, IMF에서도 집계되지 않는 통계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정책처나 이런 정부출연연구기관들 많잖아요. 그런 데서 검증된 숫자를 대통령한테 가르쳐 주셔야지, 이런 민간 연구소 숫자를 대통령 머릿속에 넣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통령께서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의논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시라……

○**이종욱 위원** 아니, 장관님도 0.15%라고 썼다니까요. 안 했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통령 말씀 보고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그 후에, 그런 자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후에 확인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종욱 위원** 아니, 이게 사실 엄청난 가짜뉴스 아닙니까? 대한상의 지난 번에 깨지는 것 봤지요, 민간 연구소 잘못 인용했다고? 똑같은 일을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주무부장관이 몰랐다, 대통령이 썼기 때문에 내가 그 숫자를 썼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공식적으로 지금 김정재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게 국가별로 직접 비

교가 힘들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국토부 차원에서 출연연구기관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번 더 검증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이종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저희가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최대로 파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준이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다 끝났거든요.

○김정재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위원장 맹성규 아니, 잠깐만요. 권영진 위원님이 자료를 좀 부실하게 받으셨다니까 먼저 자료 요구하십시오.

○권영진 위원 장관님, 구글사 지도 국외반출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렇게 3페이지짜리로 왔는데요. 이것 장관님한테 허락 말고 저한테 주신 겁니까?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저도 보고를 못 받았고요.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하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지금 위원님께 드렸고 이제 금방 저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진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의록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거라서 못 주겠다, 구글사 국외반출 허가신청서하고 그다음에 보안조치가 우려되니 보안조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방안이 있냐 이렇게 해서 다시 갖고 온 것, 이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고정밀지도를 외국계 기업에는 내주면서 허가 과정에서 보안 점검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이것 줄 수 없다며 안 주고. 그리고 구글사가 제출한 국내지도 국외반출 허가신청서 문서도 법인 등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못 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게 무슨 구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입니까? 구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 없이 관대하게 잘 지켜 주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것 좀 보자고 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지금 1차적으로는 영상 보안 처리하고 좌표 표시 제한을 수용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차적 보안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AI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2차 데이터를 가공하게 되면 민감정보 채식별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회의에서 그런 걸 짚어 봤는지 그리고 구글사에서 그것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지,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게 보안에 문제가 있는 형식으로 가공될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해소하겠다든지, 중지시키겠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한 건데 무슨 이렇게 일체 못 주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위원님,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이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

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회의록을 반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 주체로서 국토부가 참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안보실 주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자문을 거쳐서 이 회의록을 외부에 반출하는 문제 내지는 국회에 보고하는 문제까지도 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걸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영진 위원 좋아요,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걸 굳이 제가 이렇게 외부로 저한테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서……

그리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경제계 의, 기업의 우려를 제기했잖아요. 그 회의 때 경제적으로…… 만약에 이 데이터가 밖으로 나갔을 때, 이게 단순한 그냥 지도가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갔을 때 우리 산업에 미칠 그리고 이걸 가지고 구글은 플랫폼 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출혈 경쟁을 할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점점이 됐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다 통째로 못 주겠다, 못 보여 주겠다라고 얘기하니 그러면 국회에서 뭐 합니까?

그러면 한번 자료를 저한테 열람이라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 보시고요. 안 되면 제가 문제 제기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그 자료를 보시고 회의록도 보시고 구글 자료도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논의했지만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런 제약 요건이 있지만 이런 장 점도 있어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반출하는 것이 국내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일차로 법적인 검토 및 제가 일단 보고 나서 개인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만 큼은 꼭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법적인 내용보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AI 등의 추가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검토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놓쳤던 것이 없는지 그걸 확인해 달라시는 거니까 안 놓쳤더라든지 미처 생각 못 했더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가겠다든지 이 답만 주시면 되는 거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그 답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일단 회의록을 신청하셔서 가지고 말씀……

○위원장 맹성규 그런데 회의록 주셔도 다 그렇게……

○권영진 위원 회의록 줘도 아무 문제 없어요.

○위원장 맹성규 하여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사실 간사님 간에 협의해서 방법은 정회를 했다가 그냥 끝까지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잘 합리적인 합의를 하셔서……

○복기왕 위원 정회했다가 10시에 다시 하시지요. 9시에 다시 하든지. 10시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래도 되고요. 그런데 한 1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요?

○김정재 위원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끝내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장 맹성규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있으면 한 3분씩만 하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재 위원 저 3분만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저 1분만 주세요, 1분만.

○위원장 맹성규 간사님은 1분, 김 위원님은 3분.

○김은혜 위원 저 3분.

○위원장 맹성규 3분. 함께 내서……

권 위원님은 그냥 안 하고 가지게?

○권영진 위원 예.

○위원장 맹성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재 위원님 시작하세요.

○김정재 위원 장관님, 질의는 아니고요.

좀 전에 문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을 하도록, 이의 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약속대런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저희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대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있었고요. 다 아시겠지만 차관님이 참석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서로 법안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위원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논의였고 문제 제기가 이런저런 있었고 또 보류하는 데 모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류된 상황인데, 그게 마치 우리 야당이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걸 막는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발언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내용상에도 너무나 엉터리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마치 이 법은 전혀 재산권 침해가 없는데 야당 위원들은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 법을 장관님은 아마 정확하게 모르실 테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에 공공주택, 굉장히 역세권에 짓는 겁니다.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건데요.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정을 하는 겁니다. LH나 이런 데 지정권자가 ‘나 여기 이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지정을 하면 그걸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지요.

잠깐 말씀을 그냥 들어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해요. 후보지를 선정하는데 이때는 주민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맞지요? 주민들한테서 허가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후보지 선정할 때?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후보지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동의 요건은 없지만 지구지정 단계에서는 있습니다.

○김정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후보지 선정에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후보지 선정을 하면요 이때부터 법적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쪼개기가 금지됩니다. 그다음에 신축, 증축, 용도변경 불가합니다. 건축행위 불가합니다. 이게 바로 다 재산권, 나의 재산을 침해하는 겁니다. 침해한다고 모든 검토보고서에도 지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공이 토지수용을 통해서 재산권을 제약하는 사업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재산권을 제약하기 때문에 최초로 3년으로, 한시로 일몰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사업 추진이 좀 지연돼요. 그래서 이걸 일몰을 좀 더 연장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이걸 2026년, 올해 말까지 연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진석 의원님이 법안 낸 것은 이런 연장도 없애고 영구화하자, 일몰을 폐지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재산권에 제약이 있으니 좀 더 살펴보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회의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는데 야당이 따지 걸고 이래 가지고 이게 통과가 안 됐으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장관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것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철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업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걸 수용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반대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 2분의 1이 반대를 하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어요, 예외조항이. LH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주민들의 2분의 1이 철회를 해 달라고 그래도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조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차관님? 맞지요? 이 법에 지금……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재 위원 예.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하는데 LH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면 바로 주민 공람에 들어갑니다.

○김정재 위원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주민 공람에 들어간 뒤에 1년간 3분의 2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바로 해제가 되고요. 또 예정지구가 된 이후에 주민의 2분의 1, 6개월 후에 2분의 1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가 됩니다, 현재.

○김정재 위원 해제가 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법 40조7 3항 2에 보면 LH가 도심공공…… 이것은 디테일한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아니, 예외조항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김정재 위원**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지금 2분의 1이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철회할 수 있습니다. 팔호에 예외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계획을 신청한 경우—그러니까 LH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저희가 또 잘못 알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을 어제 회의 때 계속해서 김은혜 위원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LH가 신청한 부분은 철회가 불가능하다 그러니 이게 재산권이 침해가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재 위원** 장관님 이해를 하셨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고맙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매주 화요일에 법안소위가 예정돼 있고요. 화요일마다 하니까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방안을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말씀대로 해서 그 조항을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계속 공방만 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하세요.

법안소위를 여서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저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김은혜 위원님 하고 마지막에 하시지 않겠습니까? 정리하셔야 되니까.

○**이종욱 위원** 아니, 같은 걸로……

○**위원장 맹성규** 아니,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간사님끼리는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이종욱 위원** 같은 취지라서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그래요? 말씀하세요.

○**복기왕 위원** 3분 동안 하실 거예요?

○**이종욱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러면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아니아니, 이제 끝났어요.

○**복기왕 위원** 회의 진행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가만히 계세요. 끝났어요, 끝났어.

○**이종욱 위원** 복 간사님,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이종욱 위원** 같은 취지인데요. 일단 간단하게 30초만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잘 참는 사람인데, 문진석 위원님 발언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본인은 국토법안소위 위원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부결시킨 것도 아니고 1차 심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장관한테 질의하는 척하면서 저한테, 상대방 소위 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굉장히 좀 걸레라고 생각합니다. 원내수석이라고 막 해도 되는 건지, 질의요지를 국토부에서 써 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 소위 운영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는데 힘이 안 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 하여튼 이런 일은 다시 없는 게 좋을 것 같고, 별도로 적합한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회의 자주 여서서 논점을 잘 정리하시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겠습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김은혜 위원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김은혜 위원 예, 3분.

○위원장 맹성규 하세요.

이제 김은혜 위원님 질의를 끝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하고 그 뒤에 자료제출 하나……

장관님, 지난 2월 25일에 제 지역구인 분당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지역 현안도 챙겨 주셨고요. 특히 재건축, 교통 해결할 게 많은데 SRT 오리역 신설에 대해서 살펴 주셨더라고요.

수서에서 평택 구간 선로 용량이 61%였는데요. 6월이면 GTX-A 노선이 파주까지 완전 개통되고 2월 착공한 남부내륙철도 운행 수요까지 감안하면 선로 용량이 96%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복선 필요성이 나오는 건데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이 SRT 복복선화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고 오리역 신설도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현장에서 그렇게 보고받으신 게 맞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고 알고 있습니다.

○김은혜 위원 그때 장관님께서도 ‘오리역 SRT 추진이 맞는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리역 신설은 단순히 기차역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역세권 개발사업까지 가는데요. 오리역 추진이 지지부진할 것 같으니까 도시개발 담당 부서에서 오리역세권 화이트존 지정에 대해서 해야 하나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에 수서-평택 복복선화, 오리역 화이트존 신설을 좀 장관님께서 챙겨 주실 수 있도록 현장도 확인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다른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현장을 가능한 한 많이 다니면서 제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그 자체의 중요성은 제가 봐도, 정말 저는 촌놈이라 서울에서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볼 때마다 느끼거든요.

다만 5차 철도망 과정에서 국가 예산의 준비 정도가 있는 거지요. 그 예산의 한정된 범위에서 결정한다는 점이 위원님들이 저한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김은혜 위원 이해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확답을 할 수 없는 분명히 그런 약점이 있지만……

○김은혜 위원 철도포화도가 워낙 짙기 때문에, 국가기간망이라서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제가 제 눈으로 본 바로는 정말 여기 상당히 어렵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당 오실 때는 미리 연락만 주시면 제가 현장에서 설명도 해 드리고요 아침 식사도 사 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김은혜 위원 또 그때 민주당 예비후보자에게 걸어 주신 목도리 제가 장관님께도 걸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리역 신설과 함께 화이트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저하고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위원장 맹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사님, 회의 운영에 대해서 또 항의하실 거면 하지 마시고.

○복기왕 위원 매우 유감입니다.

○위원장 맹성규 오늘 회의를 보셔서 알겠지만 통상적인 방향하고 좀 달리 운영을 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임기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아서 가능한 한 현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회의를 이렇게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회의가 얼마나 열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간사님들이 법안소위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임기 내에 저희가 처리할 것은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셔도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기관장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일주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및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은혜 위원 자료제출 요구 하나만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맹성규 예, 말씀하세요.

○김은혜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HUG하고 LH·코레일 자료 미제출과 관련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2월과 3월에 HUG하고 코레일 사장 인사가 있었는데요. LH와 코레일·HUG까지 세 곳 기관의 지원자가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1차 서류심사 심사평가표, 2차 면접심사 심사평가표 제출을 요구했는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정부 지침을 이유로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보다 재정부 지침이 상위법으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3개 기관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고 의원실에 이번 주 안에 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공시가격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니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공시가격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어차피 지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를 그대로 가져갔다면 민간 정비 그리고 세 부담 완화까지 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과 공시가격 전수조사에서 실거래가가 변동이 없거나 하락했는데도 공시가격이 오른 사례 또 실거래가 변동에 비해서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오

른 사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성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예.

○위원장 맹성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권영진 김도읍 김은혜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맹성규 문진석 민홍철 박용갑
배준영 복기왕 손명수 송기현 안태준 염태영 윤종오 이건태 이연희 이종욱
전용기 정점식 정준호 천준호 황운하

○청가 위원(4인)

염태영 윤재옥 윤종균 한준호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문대림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전문위원 오세일

입법심의관 이유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제1차관 김이탁

제2차관 홍지선

기획조정실장 남영우

국토도시실장 정의경

주택토지실장 김규철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김영국

교통물류실장직무대리 정채교

항공정책실장 주종완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박준형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도로국장 이우제

철도국장 김태병

감사관 박정호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직무대리 문희선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

단장 김태오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단장 방현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상임위원 박지홍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기획조정관 박상옥
새만금개발청
청장직무대행 정인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 조경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직무대행 이상재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태승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김범호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 박재희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현욱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최인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안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언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어명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정왕국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 이윤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손우준

【보고사항】

○의안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6.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30)

2월 9일 회부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9.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67)

2월 10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4)

이상 5건 2월 11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1. 복기왕 의원·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56)

2월 12일 회부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2.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06)

2월 13일 회부됨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3. 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5)

2월 19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9.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85)

이상 3건 2월 20일 회부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04)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0.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27)

이상 2건 2월 23일 회부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7)

이상 2건 2월 24일 회부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5)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79)

이상 3건 2월 25일 회부됨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3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5)

이상 3건 2월 26일 회부됨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6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9)

이상 4건 2월 27일 회부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손명수 의원·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7.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3)

이상 4건 3월 3일 회부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7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93)

이상 3건 3월 4일 회부됨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7)

이상 4건 3월 5일 회부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5.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5.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8. 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6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6.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0. 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43)

이상 8건 3월 6일 회부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7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02)

이상 2건 3월 9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1.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79)

3월 12일 회부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2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0)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2.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8)

이상 4건 3월 13일 회부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3.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2)

3월 16일 회부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7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최보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9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0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복기왕 의원·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0)

이상 9건 3월 17일 회부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윤종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7.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2)

이상 3건 3월 18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1)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

(2026. 3. 1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8)

이상 2건 3월 19일 회부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9.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0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3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 3.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0.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70)

이상 7건 3월 23일 회부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3.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2)

이상 4건 3월 24일 회부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06)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2)

이상 2건 3월 25일 회부됨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3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5.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52)

이상 2건 3월 26일 회부됨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7)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6. 복기왕 의원·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86)

이상 4건 3월 27일 회부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02)

이상 2건 3월 30일 회부됨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3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30.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70)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3. 31.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7938)

이상 7건 3월 3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2. 10.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99)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10.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13)

이상 2건 2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2. 12.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38)

2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2. 19.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94)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3.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59)

2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2. 26.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5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2. 26.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71)

이상 2건 2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4. 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05)

3월 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30.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8)

3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24)

3월 1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인 주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3. 16.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0)

3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8.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5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6. 3. 18.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이상 2건 3월 1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6. 3. 19.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27)

3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3. 24.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18)

3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위원회 직접 회부

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4. 김석기 의원·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03)

12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48)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63)

이상 3건 12월 31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3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02)

2026년 1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9)

1월 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16.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6)

1월 1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1. 30.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41)

교통기본법안

(2026. 1. 3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76)

이상 2건 2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6. 2. 6.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47)

2월 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3. 16. 복기왕 의원·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0)

이상 2건 3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 3. 20. 복기왕 의원·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67)

3월 23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청원 회부**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국회 차원 점검 및 추진 촉구에 관한 청원**

(2026. 2. 22. 김종진 외 51,20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76)

2월 23일 회부됨

노동 감시가 아닌 사고 예방, 시민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에 관한 청원

(2026. 3. 4. 정주희 외 50,70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81)

3월 5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36065호	2026. 1. 27.	대통령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073호	2026. 2. 3.	대통령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부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 1. 30.	부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9호	2026. 1. 30.	부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60호	2026. 1. 23.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5호	2026. 1. 26.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92호	2026. 1. 29.	입법예고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8호	2026. 2. 2.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5호	2026. 2. 5.	입법예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42호	2026. 2. 10.	입법예고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6124호	2026. 2. 26.	대통령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149호	2026. 2. 27.	대통령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151호	2026. 2. 27.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152호	2026. 2. 27.	대통령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153호	2026. 2. 27.	대통령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6.	부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3호	2026. 2. 27.	부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4호	2026. 2. 27.	부령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6호	2026. 2. 27.	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6. 2. 27.	부령

행정입법명	공포번호	공포일자	비고
	제156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568호	2026. 2. 27.	부령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31호	2026. 2. 26.	입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243호	2026. 2. 27.	입법예고